IF Report

2020-04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김기식 정책위원장, 박선나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IF 더미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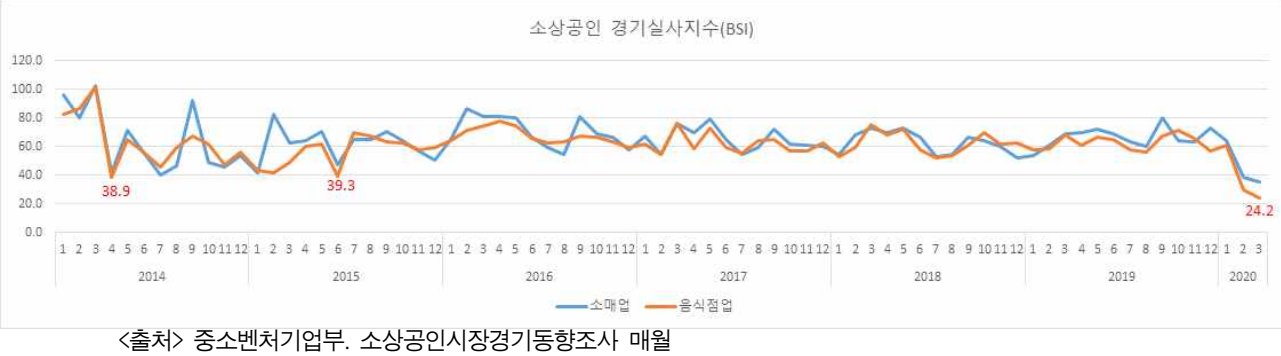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THE FUTURE

1. 서론

-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기를 1929년 대공황 직후와 비견될 정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로 작년 4분기 대비 2.7%p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6.4%로 전분기 대비 7.3%p 감소해 IMF 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1] 특히 국내외적 경기변동에 민감성이 가장 높은 자영업자는 소비급감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매월 측정하는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100초과=호전, 100미만=악화)'를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에 끼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올해 2020년 3월 경기실사지수(음식점업)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지수 38.9)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이후(39.3)에 이어 역대 최저(24.2)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림 1>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매월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3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 들어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취업자는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0.1			2020.2			2020.3		
	수	구성비	증감률	수	구성비	증감률	수	구성비	증감률
전체	26,800	100	2.2	26,838	100	1.9	26,609	100	-0.7
임금근로자	20,376	76.0	2.9	20,393	76.0	2.5	20,056	75.4	-0.7
- 상용	14,586	54.4	4.8	14,596	54.4	4.4	14,561	54.7	3.3
- 임시	4,423	16.5	-0.7	4,507	16.8	-0.3	4,284	16.1	-8.9
- 일용	1,367	5.1	-4.3	1,290	4.8	-7.6	1,211	4.6	-12.5
비임금근로자	6,423	24.0	0.0	6,445	24	-0.1	6,553	24.6	-0.9
-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450	5.4	-10.1	1,459	5.4	-9.1	1,398	5.3	-12.2
-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4,011	15.0	4.0	4,024	15	3.8	4,139	15.6	3.1
- 무급가족 종사자	962	3.6	1.0	962	3.6	-0.8	1,016	3.8	0.8

<출처> 통계청. 2020년 고용동향 매월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최종검색일: 2020.4.23.) https://ecos.bok.or.kr/jsp/vis/keystat/#/detail

- **현재 이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시행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발표해 오고 있다.
    - 3월 19일, 기획재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1)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자금을 신규공급(총 12조원)하고, 초저금리(1.5%수준)를 적용하며, 2)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3)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한 전액보증 지원(총 3조원)" [2]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주요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저임금근로자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지원 등)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감면,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제상 지원 방안" [3]도 실시하기로 했다.
    - 3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인 고용유지를 하도록 고용유지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4~6월)으로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4]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에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25% 수준임에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 [5]였다.
    - 4월 7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39만 3천여명(해당 체납액 4,523억 원)에 대해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체납처분의 유예" [6]를 결정했다.
    - 4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월50만원 x 3개월)을 지급" [7][8]하기로 발표했다.
  -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형식으로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4월 초 지방의회 의결기준, "부산은 '긴급민생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강릉)은 '긴급생활안정지원'의 명목으로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은 가구당 3~50만원의 지역화폐를, 충남은 100만원 상당의 지원에 지급방법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9]하기로 했다.
    - 4월 23일 서울시는 약 6천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업력 6개월 이상,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70만원씩 2개월 간(5,6월) 지원하기로 결정했

---

2) 관계기관합동. (2020.3.19.)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 관계기관합동. (2020.3.19.)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3.25.) 사상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5) 세이프타임즈. (2020.3.25.)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97
6)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0.4.7.)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7) 한국경제. (2020.4.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29502i
8) 관계부처합동. (2020.4.22.)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9) 윤여문·박은형. (2020.4.13.)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7호

다. 지원 대상은 약 41만개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10)]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자영업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킨 촉진제였을 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자영업의 구조적인 몰락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 상황처럼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겪는 자영업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역사적으로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IMF이후 자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업종별 부침을 고려하여 자영업 전반의 구조적 대책을 도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 본 보고서는 주로 '통계청 고용동향-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중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면세) 통계'를 통해서 자영업자 실태를 파악했다.

10) 서울특별시 뉴스. (최종검색일: 2020.4.28.)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8268

2. 자영업 기본현황: 구조적 몰락기에 접어든 자영업

1. 몰락의 구조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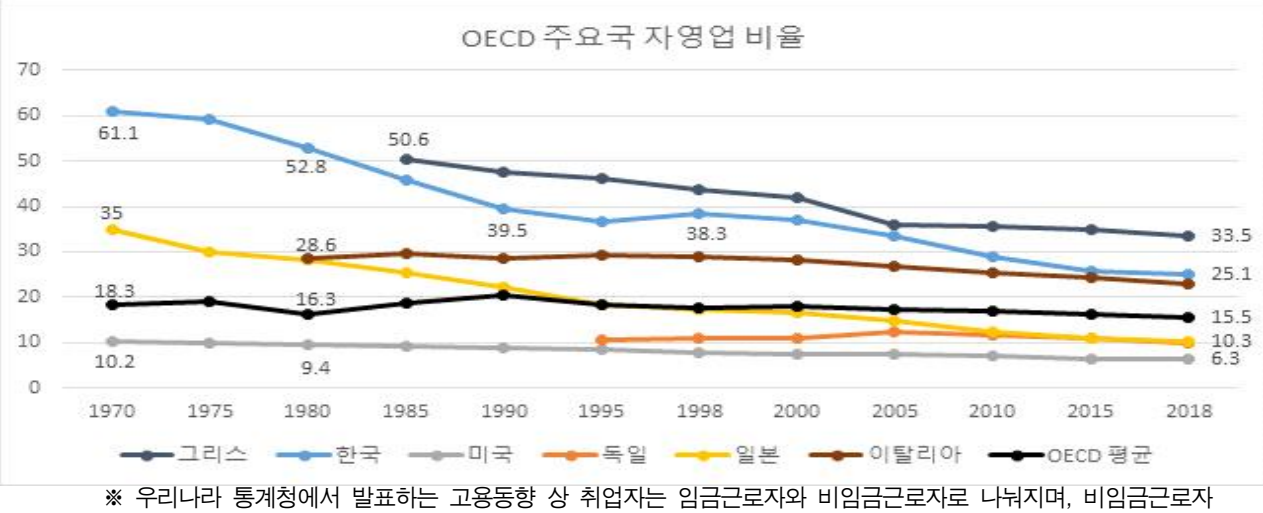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자영업이 구조적 몰락기에 놓여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잉공급상태였다는 점이다. 80년대까지는 비임금근로자 중 농업인이 많았던 요인[11]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배제하더라도 90년대까지 농업인구의 감소로 급격히 감소하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의 비중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으로 실직한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에 유입되면서 높아져 지금까지도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로 그리스, 터키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OECD 자영업 비율(비임금근로자 수÷전체 취업자 수)을 보면, OECD 평균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균 10% 중후반대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독일은 1970년대 이래로 자영업 비율이 10% 내외로 OECD 평균 이하를 유지해왔고, 일본은 1970~90년대 초까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항상 웃돌았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도 30% 후반대를 유지하다 2010년이 지나면서 30%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 OECD 40개 회원국을 비교분석한 문성웅·전인우(2011)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산업전체 자영업자 비율은 7.4~9.0% 과잉이며, 규모로는 176.8~212.2만명 과잉인 것으로 추정"[12]했다.

<그림 2> OECD 주요국 자영업 비율(Self-employment rate, 1970~2018) (단위: %)



※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 상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눠지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뉜다. OECD에서 집계하는 자영업 비율에 포함되는 자영업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의미함.

* OECD 통계에서 한국수치가 포함된 것은 1988년부터이므로, 1970~1985년도 수치는 통계청 비임금근로자 수치임.

<출처> OECD Data. Self-employment rate(1990~20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7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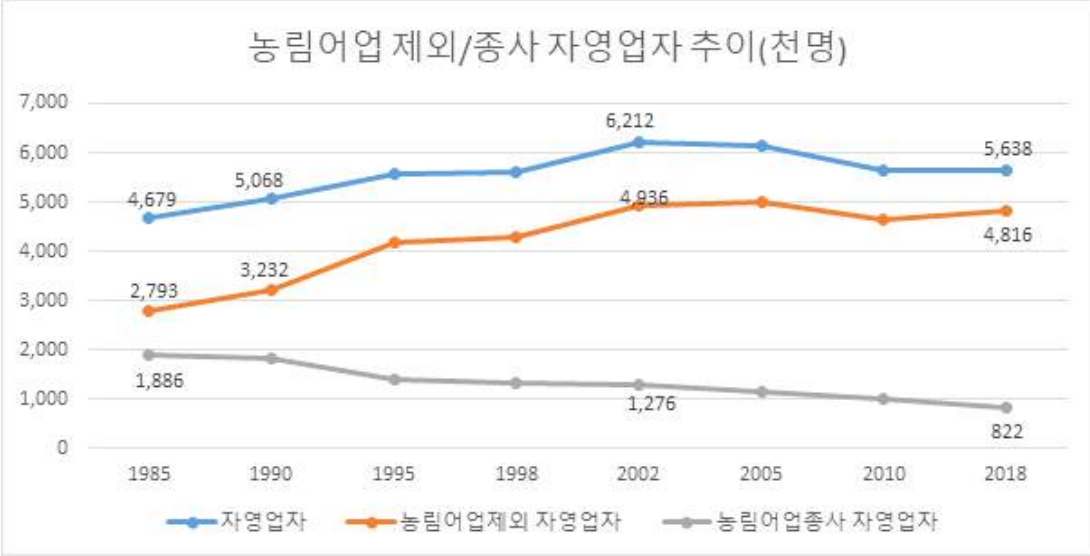
11)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이 1970년 45.8%, 1975년 38.1%, 1980년 28.9%, 1985년 21%, 1990년 15% 수준이었고, 지금은 2018년 기준 4.5% 수준임. 한국노동연구원은 자영업자를 논할 때 농림어업분야 비임금근로자는 제외하고 논해왔음.

12) 류덕현 외. (2015).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p.11

-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그림 3>), 자영업 중 농림어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농림어업분야를 제외한 직종에서 자영업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85년만 해도 자영업자 중 농림어업분야를 제외한 종사자가 약 59%였는데, 자영업자 수가 정점이었던 2002년에는 약 80%, 2018년에는 약 85%를 구성하고 있다.

  - 한편, 앞서 <그림 2>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 추세인 것을 확인했는데, 아래 <그림 3>을 보면 같은기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자영업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자영업 비율이 전체 취업자를 분모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로 인한 취업자 증가가 대체로 임금근로자 증가로 이어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폭이 자영업자 증가폭보다 컸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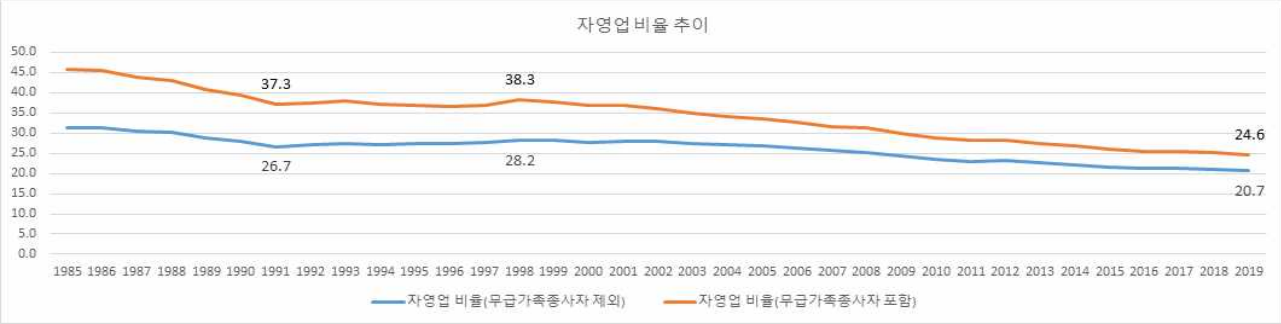
<그림 3> 자영업자 중 농림어업제외/종사 자영업자 수 추이(1985~2018) (단위: 명)



<출처> 이승렬. (2018).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8-10.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연도) 참고 재가공

- 2002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와 자영업 비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자 수는 위 <그림 3>에서 보았듯, 2002년 620만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560만으로 현재 약 10% 감소했다. 자영업 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4, p.7>를 보면, 국제통계에서 활용되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율은 1998년 38.3%(정점)에서 2019년 24.6%로 13.7%p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 비율도 마찬가지로 같은기간 28.2%(정점)에서 20.7%로 7.5%p 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 및 장래 총인구 수 감소 요인 등에 의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자영업 비율 추이(1985~2019) (단위: %)



<출처>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 각 연도

- **둘째,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경제성장률, 1인당 GDP, 1인당 GNI)을 고려해볼 때, 자영업 비율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이 대체로 역의 관계에 있고,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진다"[13]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 경제성장률이 일정 단계로 둔화되면 자영업 비율은 경향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를 보면, 미국과 독일은 70년대 이래로 연평균 성장률이 3% 내외인 선진국형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 해당 기간 미국과 독일의 자영업 비율은 10% 내외로 OECD 평균(15% 내외)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일본은 6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한 후 70년대 이래로는 성장률이 둔화되어 3~4%대를 유지했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로,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영업 비율이 46.6%에서 35%로, 35%에서 28.1%로 급속히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연평균 성장률 10% 내외의 고속성장을 해오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성장률이 둔화해 3% 내외가 됐고, 자영업 비율도 2010년대 들어서 3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등의 요인으로 자영업자가 과잉공급된 측면이 있지만,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에 비추어볼 때, 선진국의 경험과 같이 앞으로도 자영업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60년대 이후 주요국 GDP 성장률과 자영업 비율 비교 (단위: %)

국가	항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미국	GDP성장률	4.7	3.2	3.1	3.2	1.9	2.3
	자영업비율	16.1	10.2	9.4	8.8	7.4	7
독일	GDP성장률	4.4	3.3	2.0	2.2	0.8	2.1
	자영업비율	통일(1990년 포함)이전 통계 부재			10.7	11	11.6
일본	GDP성장률	10.4	4.3	4.3	1.5	0.5	1.4
	자영업비율	46.6	35	28.1	22.3	16.6	12.2
한국	GDP성장률	9.5	10.5	8.8	7.1	4.7	3.4
	자영업비율	-	61.1	52.8	39.5	36.9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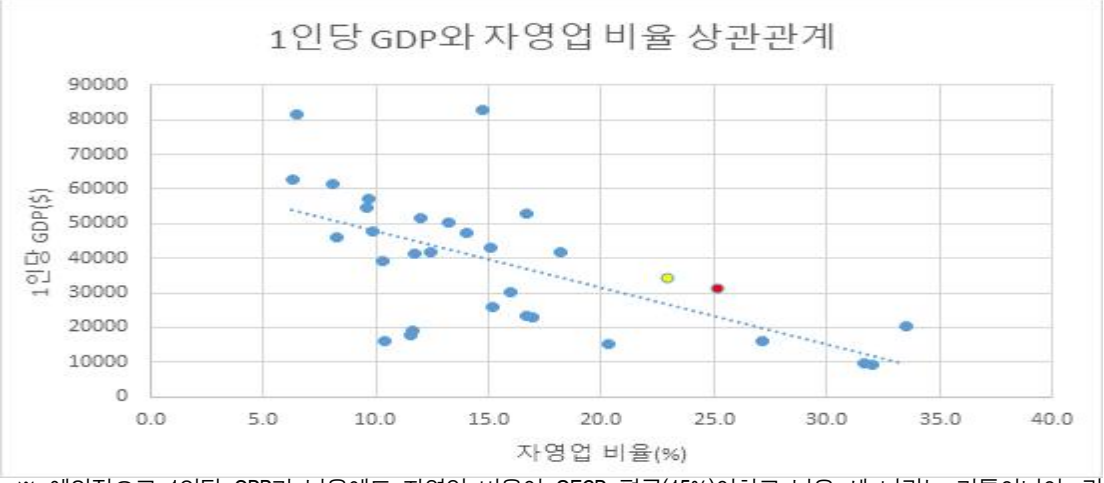
* GDP 성장률은 해당년대 평균값. 그 중 1960년대는 1960년 자료 미비로 1961~1969년 평균값이며, 2010년대는 2010~2018년 평균값임. 자영업 비율은 OECD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자료임.

<출처> The World Bank. GDP growth(annual) (1961~2018), 독일 60년대 GDP growth- Countryeconomy. (최종검색일: 2020.4.28.) https://countryeconomy.com/gdp/germany?year=1960

13) 주동헌 외. (2013) 지역경제 자영업 활동 결정요인 및 구조개선 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3-10, P.112

- 2018년 단일연도만 보아도, OECD 국가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율은 실제로 '역의 상관관계' 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GDP가 3만 천달러 규모(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빨간점 표시)와 3만 4천달러 규모인 이탈리아(노란점 표시)가 예외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고, 다른 OECD 국가는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자영업 비율이 낮은 구조를 보였다(<그림 5>).

<그림 5> 1인당 GDP(미국달러)와 자영업 비율 상관관계(2018년) (단위: $, %)



※ 예외적으로 1인당 GDP가 낮음에도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15%)이하로 낮은 세 나라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로 모두 동유럽국가임.

<출처> 1인당 GDP-The World Bank. GDP per capita(2018), 자영업 비율-OECD Data. Self-employment rate(2018) 참고 재가공

- 또한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 적합한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와 자영업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영업 비율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1978~1980년 사이에 모두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을 돌파했고, 1990년 이전에 2만불을, 1995년 이전에 3만불을 돌파했다. 만불 돌파시점에서 3만불 돌파시점 사이 자영업 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1978년에서 1996년 사이 자영업 비율이 9.2%에서 8.4%로 감소했고, 일본은 1980년에서 1992년 사이 28.1%에서 20.2%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95년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을 돌파한 후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하는 등 비교적 최근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같은기간 자영업 비율이 36.8%에서 25.1%로 감소 추세에 있다.

<표 3> 주요국 1인당 GNI(국민총소득, current US$기준)와 자영업 비율 비교 (단위: %)

국가	항목	만불 돌파시점	이만불 돌파시점	삼만불 돌파시점
미국	1인당 GNI	1978년	1987년	1996년
	자영업비율	9.2	8.9	8.4
독일	1인당 GNI	1979년	1990년	1996년
	자영업비율	-	-	10.8
일본	1인당 GNI	1980년	1988년	1992년
	자영업비율	28.1	24.2	20.2
한국	1인당 GNI	1995년	2007년	2018년
	자영업비율	36.8	31.7	25.1

* 자영업 비율은 1인당 GNI가 만불, 이만불, 삼만불 돌파했을 시점의 OECD 기준 자영업자 비율임.

**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통일(1990년 포함)이전 자영업 비율 통계 부재함.

<출처> The World Bank. GNI(Atlas method(current US$))

- **셋째, 앞으로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총인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로 자영업자가 구조적으로 과잉 양산됐음에도 규모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19년을 정점으로 자연인구는 감소[14] 추세에 접어들었고, 특히 주요 소비주력층인 2030 세대 비중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와 2030 세대 비중이 줄어들자 자영업 비율이 줄어든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겪은 일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통계청에서 2017년 실시한 장래인구추계(저위가정)[15]에 따르면(<그림 6>), 2019년이 우리나라 총인구의 정점이며, 앞으로 약 10년뒤인 2030년부터 인구는 2020년보다 1.9% 감소, 약 20년뒤인 2040년에는 6.5% 감소(이는 우리나라 2003년 총인구 수준), 약 30년뒤인 2050년에는 14.8% 감소할 것(이는 우리나라 1993년 총인구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총인구(1993~2019) 및 장래인구추계(2020~2050) (단위: 명)

* 저위추계란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저위가정을 조합한 결과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3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제 총인구 수이며, 2020~2050년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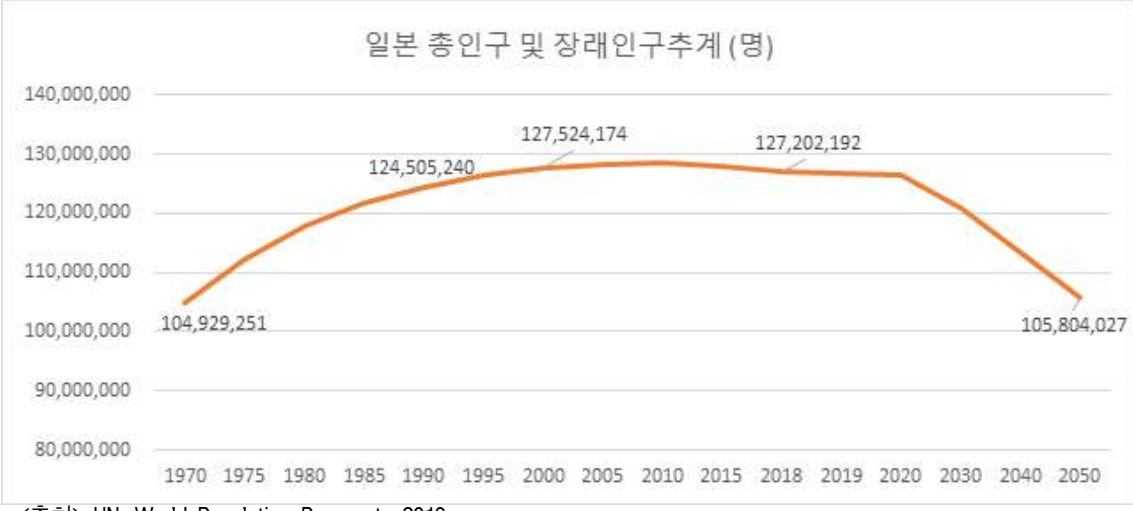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993~201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 2010년 인구 수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자영업자 비율이 16.6%에서 10.3%로 6.3%p 감소(<그림 7>, <그림 8>)**했다. 1억명이 넘는 일본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가 약 8백만명 가량 준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는 총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특히 전체 인구에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2030 세대 비중은 2000년 27.6%에서 2018년 21.5%로 6.1%p 감소**[16]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일본연구소 김현철 소장은 "일본의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동네 술집, 밥집, 세탁소 등과 같은 음식, 도소매업 등에서 자영업 인구가 대폭 줄었다"[17] 고 분석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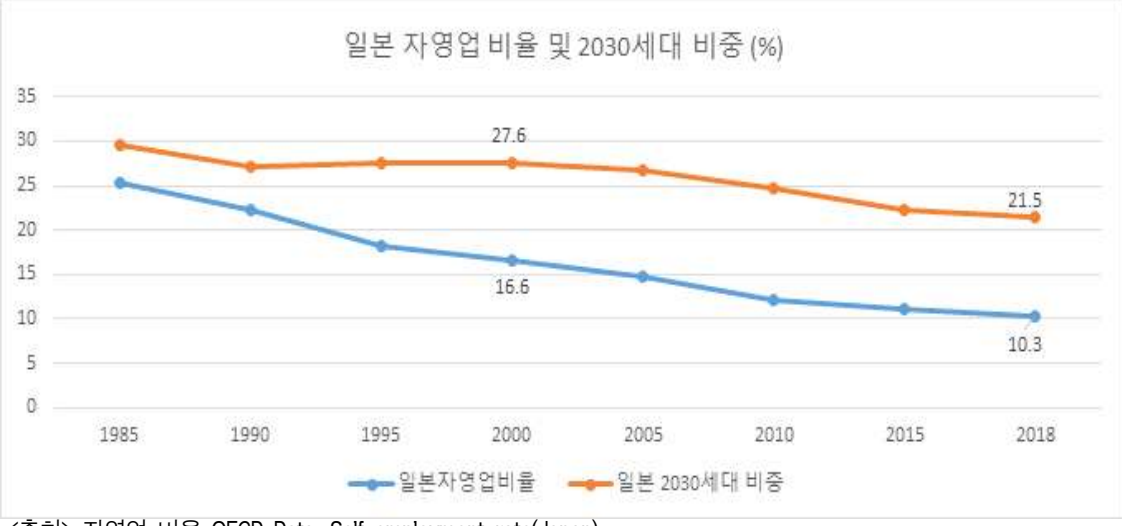
14) 2019년 11월부터 자연인구(출생자-사망자) 감소 추세에 들어갔는데,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함.
15) 저위가정을 제시한 이유는 2017년 시점 이후로도 출산율은 매해 감소하고, 사망률은 매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임.
16) 人口統計資料集(2005, 2020). (최종검색일: 2020.4.6.)
http://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opular2020.asp?chap=0
17) 서울신문. (2017.4.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0003001

<그림 7> 일본 총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단위: 명)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그림 8> 일본 자영업 비율 및 2030 세대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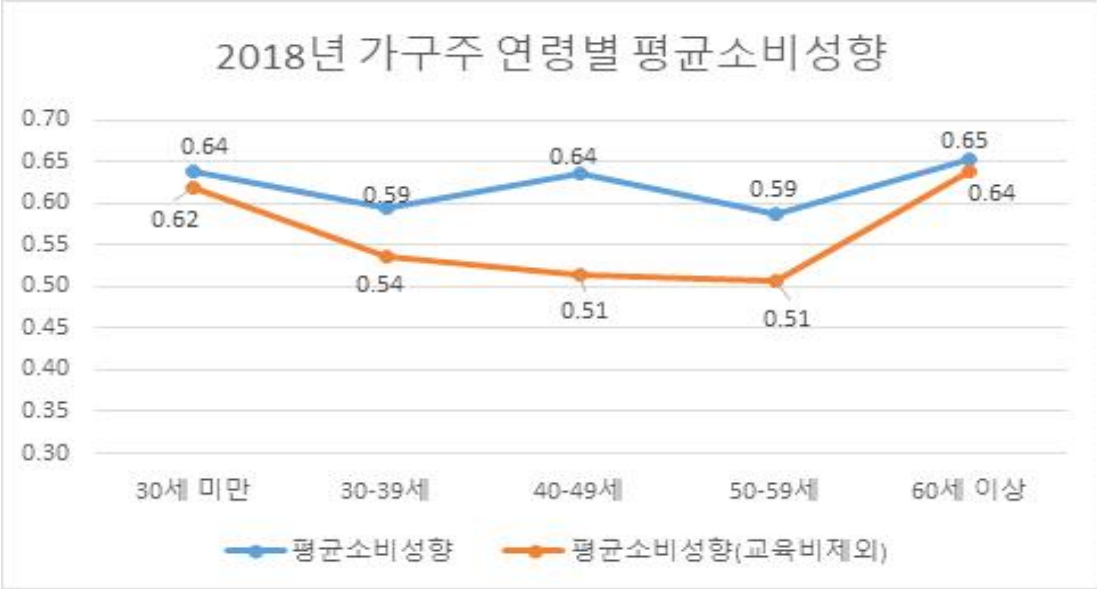
<출처> 자영업 비율-OECD Data. Self-employment rate(Japan),
2030 세대 비중-人口統計資料集(年齡(5歲階級)別総人口-해당 연도)

- 우리나라 역시 총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 4050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가계의소비지출÷가계의처분가능소득)[18]이 높은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의해 앞으로 특히 음식, 도소매업 분야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 <그림 9>에서 보듯,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소비성향은 교육비 지출을 제외할 경우, 30세 미만(20대)이 0.62, 30대가 0.54로 40대와 50대(각 0.51, 0.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 세대의 소비지출 중 음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 31%로, 4050 세대의 28%, 27.5%보다 약 4%p 더 높았다.

18) 권규호·오지윤(2014)에 따르면, "보통 연령별 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다가 상대적 고소득을 구가하는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에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교육비 지출이 커 40~50대에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W자형태를 띠는 것(p.51)"으로 나타남.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교육비 지출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주 연령층을 2030대로 봄.

<그림 9> 2018년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은 (가계의 소비지출)÷(가계의 처분가능소득)임. 여기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비소비지출)을 통한 계산 값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30%였는데, 2019년에는 26.8% 수준으로 약 4%p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고령화의 요인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통계청 추계상 2030년에는 23%, 2040년과 2050년에는 각각 17.6%, 14.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0>).

<그림 10> 총인구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 201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 이를 위 평균소비성향 결과와 종합해보면, **음식료, 소매 등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2030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수록 관련 업종의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30세 미만 연령층만큼이나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앞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2030 세대의 비중이 줄더라도 자영업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젊은층과 고령층의 소비양태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연령별 소비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2018년 '음식료품'과 관련해 30세 미만과 30대의 연평균 지출은 각 643만원, 870만원이었던 반면, 60세 이상은 58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의료비'는 30세 미만과 30대에서 연평균 각 75만원, 128만원을 지출한 반면, 60세 이상은 214만원을 지출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이 미래에도 비슷하다는 전제하[19]에, **소매, 음식업 등을 중점으로 활성화된 기존 자영업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성업하기 어렵고, 오히려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고령자 소비성향에 맞는 업종 및 자영업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19) 김주영 외.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925. p.238

2. 자영업 구조조정의 실태와 현황

- **이하부터는 과거와 비교한 최근의 국내 자영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영업의 구조적 몰락이 주로 어떤 업태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지표 1 – 자영업자 전반 현황(업태, 규모, 연령별)**

1) 자영업자 업태별 비중

- 국내 자영업자는 주로 3차산업에 기반한 종사자 비중(2020년 1월 기준 86%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다(<표 4>). 그러나 3차산업 기반 자영업자가 그동안 모두 같은 흥망성쇠를 겪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구체적인 업태 추이를 보면 1,2차산업 기반 자영업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3차산업 기반 자영업자는 특히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8년에는 소매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 순, 2008년과 2018년에는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20]>소매업 순으로 자영업 종사자가 많았다. **1998년과 비교해 자영업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업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이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98년에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자영업자 비중이 45%를 차지한 반면, 18년에는 30.5%로 20년 사이에 약 15%p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업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앞서 언급한 2030 세대 비중의 감소 및 소비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자산 보유율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 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자영업자 업태별 비중(1998~2020) (단위: %)

산업	업태	개인사업자 비중			
		1998년 (265만명)	2008년 (473만명)	2018년 (673만명)	2020년 1월 (722만명)
1차	농・임・어업	0.0	1.2	1.0	1.0
	합계	0.0	1.2	1.0	1.0
2차	제조업	9.3	7.2	6.1	5.8
	전기가스수도업	0.0	0.0	1.0	1.2
	건설업	7.0	5.1	5.5	5.4
	합계	16.3	12.3	12.6	12.4
3차	도매업	8.2	8.3	6.9	6.6
	소매업	20.3	14.9	13.0	12.9
	부동산매매업	0.0	0.2	0.2	0.3
	음식업	16.5	12.3	10.6	10.2
	숙박업	1.0	0.7	0.7	0.7
	운수창고통신업	9.9	9.9	8.2	7.8
	부동산임대업	15.8	22.2	27.6	29.0
	대리중개도급업	2.3	0.6	1.0	1.0
	서비스업	9.6	17.3	18.0	18.0
	합계	83.7	86.5	86.4	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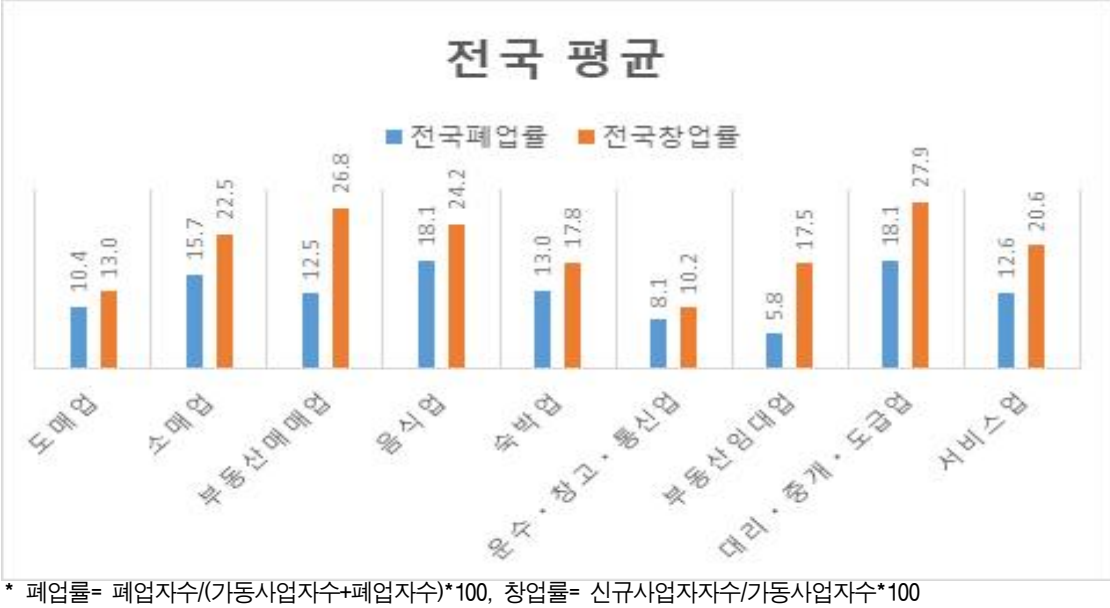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20) 서비스업에는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광고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관련서비스(부동산중개업), 예술, 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이미용, 욕탕, 세탁업 등) 광범위한 집단이 포함됨.

1-1) 자영업자 업태별 폐·창업률

- 2018년 3차산업 기반 자영업 중에서 폐업률이 높은 상위 세 업태는 1) 대리중개도급업(18.1%, 예_상품중개업(야쿠르트 대리점 등), 무역중개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2) 음식업(18.1%), 3) 소매업(15.7%) 순이었다. 창업률이 높은 상위 세 업태는 1) 대리중개도급업(27.9%), 2) 부동산매매업(26.8%), 3) 음식업(24.2%) 이었다(<그림 11>).

<그림 11> 2018년 3차산업 자영업자 업태별 전국 폐업률, 창업률 (단위:%)



* 폐업률= 폐업자수/(가동사업자수+폐업자수)*100, 창업률= 신규사업자자수/가동사업자수*100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 폐업률이 높은 세 업태 중 '대리중개도급업' 종사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 수준으로 자영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소매업이나 음식업' 종사자는 예전보다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전체 자영업자의 각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소매업이나 음식업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매업이나 음식업의 폐업률과 창업률은 지난 2008년 이래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두 업태 모두 창업률이 폐업률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당 시장이 포화상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소매업 폐업률은 2008년 18.3%에서 15.7%로 2.6%p 감소했으며, 창업률은 2008년 26.4%에서 22.5%로 3.9%p 감소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2008년 22.6%에서 2018년 18.1%로 4.5%p 감소했으며, 창업률은 같은 기간 31.2%에서 24%로 7.2%p 감소했다(<표 5>).

<표 5> 2008~2018년 음식업과 소매업 업체 수 및 폐업·창업 현황 (단위: 개, %)

연도	소매업					음식업				
	업체수	폐업수	폐업률	창업수	창업률	업체수	폐업수	폐업률	창업수	창업률
2008	707,003	158,228	18.3	186,668	26.4	581,691	170,707	22.6	181,275	31.2
2009	739,109	159,447	17.7	197,825	26.8	597,197	168,935	22	185,384	31
2010	762,531	170,034	18.2	202,567	26.6	611,805	176,065	22.4	193,743	31.7
2011	778,704	181,375	18.9	203,179	26.1	620,939	178,352	22.3	189,099	30.5
2012	787,765	181,239	18.7	193,747	24.7	627,980	167,197	21	175,668	28
2013	784,485	170,338	17.8	178,605	22.8	639,343	158,892	20	172,100	27
2014	811,329	154,250	16	185,987	22.9	666,251	156,470	19	184,872	27.7
2015	841,189	146,913	14.9	187,562	22.3	691,252	152,553	18	182,269	26.4
2016	832,972	165,726	16.6	186,147	22.3	693,114	165,724	19.3	181,689	26.2
2017	845,580	167,363	16.5	190,117	22.5	702,292	163,57	18.8	175,886	25
2018	873,096	162,884	15.7	196,288	22.5	714,830	157,990	18.1	172,801	24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2) 자영업자 규모별(업태*규모별) 비중[21]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22], 면세사업자[23]로 나눠진다. 본 보고서는 이 중 간이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정의한다. **지난 20년간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중 일반사업자 비중은 증가(57.3%→72.1%)하고 영세사업자 비중은 줄어드는(42.6%→27.9%) 추세**다(<표 6>).

<표 6> 자영업자 규모별 비중(1998, 2008, 2018) (단위: %)

항목	1998		2008		2018	
	일반사업자	영세사업자	일반사업자	영세사업자	일반사업자	영세사업자
비중	57.3	42.6	60.2	39.8	72.1	27.9

※ 1998년의 경우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과세특례자로 나뉘어졌음. 당시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로, 현재의 기준에서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사업자 비중에 포함함. 한편 과세특례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현재 기준에서 영세사업자에 포함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 자영업자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3차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2018년 기준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태는 숙박업(50.4%), 소매업(46.0%), 서비스업(36.3%), 운수창고통신업(35.7%), 음식업(32.6%) 순이었다(<그림 12>). 해당 업태는 지난 10년 동안 영세사업자 비중이 줄어왔는데, 그 중 음식업 영세업자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1998년 음식업 종사자 중 영세사업자가 49.5%에 달했었는데 2008년에는 53.1%로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32.6%로 08년 대비 20.5%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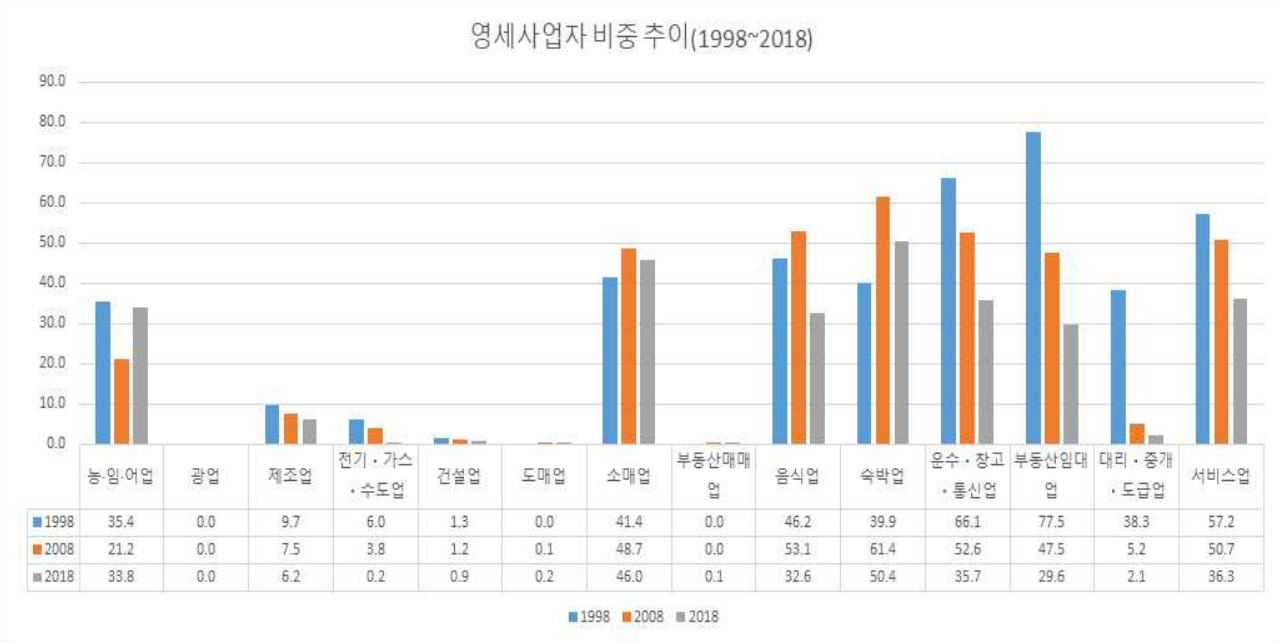
- **앞서 자영업자 업태별 비중 통계(<표 4>)를 통해 지난 20년간 소매업과 음식업 자영업자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규모별 데이터와 종합해보면 소매업과 음식업 비중은 대체로 '영세사업자' 비중이 줄어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식업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영세업자의 몰락은 앞서 언급한 대로 경제발전수준 및 2030 세대 감소**

21) 본 보고서에서 '규모별 비중' 분석에 한해서는 개인사업자 범위에 '면세사업자'를 제외함. 면세사업자는 매출규모로 분류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임.
22)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3) 부가가치세법상(제26조, 제27조) 면세 대상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회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 지원정책에 있어서 음식업 등 영세사업자를 유지시키거나, 동종업종에 재창업시키기보다는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 한편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업태에서 영세업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해당 업태에서 소위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자영업자 업태별 영세사업자 비중 추이(1998, 2008, 2018) (단위: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중개·도급업	서비스업
1998	35.4	0.0	9.7	6.0	1.3	0.0	41.4	0.0	46.2	39.9	66.1	77.5	38.3	57.2
2008	21.2	0.0	7.5	3.8	1.2	0.1	48.7	0.0	53.1	61.4	52.6	47.5	5.2	50.7
2018	33.8	0.0	6.2	0.2	0.9	0.2	46.0	0.1	32.6	50.4	35.7	29.6	2.1	36.3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2-1) 업태*규모별 폐·창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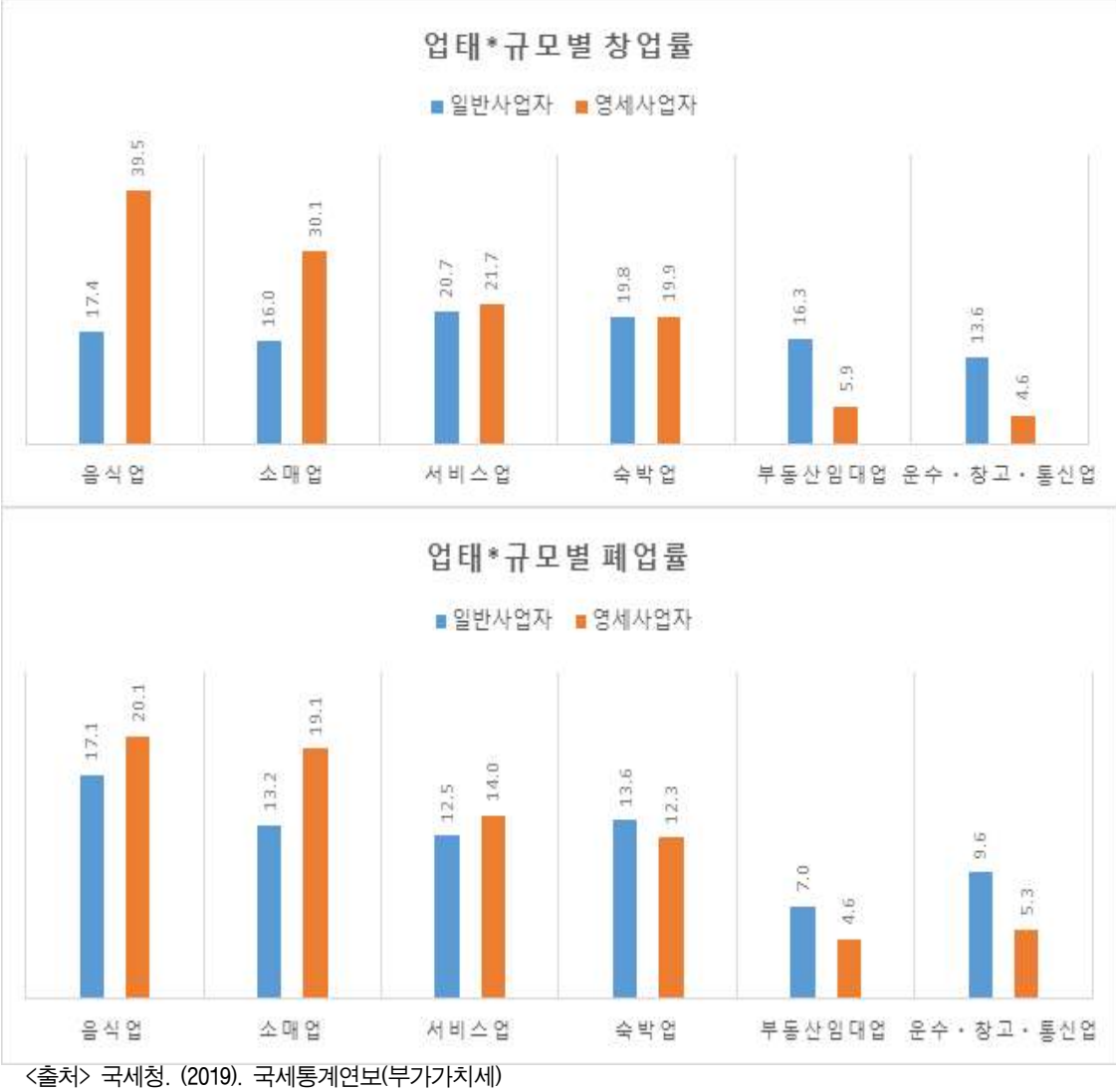
- 2018년 3차산업 업태 중 규모별 창업률(<그림 13>)을 보면, **영세사업자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은 도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대리중개도급업을 제외하면[24] 영세사업자일수록 '음식업과 소매업'에서 창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태의 경우 앞서 업태별 비중에서 보았듯이, 자영업에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의 창업률이 일반사업자의 창업률에 비해 많게는 약 15~22%p까지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음식업에서 일반사업자 창업률은 17.4%이었던 반면, 영세사업자 창업률은 39.5%로 영세사업자 창업률이 약 22%p 더 높았다. 소매업의 경우도, 일반사업자 창업률이 16%였던 반면, 영세사업자 창업률은 30.1%로 영세사업자 창업률이 약 14%p 더 높았다. 즉, **영세사업자일수록 여전히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나 음식업으로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 한편, 소매업과 음식업에서 영세사업자 창업률이 높았던만큼 폐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에서 일반사업자의 폐업률이 13.2%인 반면 영세사업자는 19.1%로 영세사업자 폐

24) 도매업 영세(간이)사업자는 679명이었으며, 부동산매매업은 15명, 대리중개도급업은 영세사업자가 1,361명에 불과했음. 이는 소매업 35만 8,341명, 음식업 23만 3,133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임.

업률이 약 6%p 높았고, 음식업에서는 일반사업자 폐업률이 17.1%, 영세사업자가 20.1%로 약 3%p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영세사업자가 많이 진출하는만큼 많이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고, 소매업과 음식업에 있어서 영세사업자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영세업자가 해당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은 구조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2018년 업태*규모별 창업률, 폐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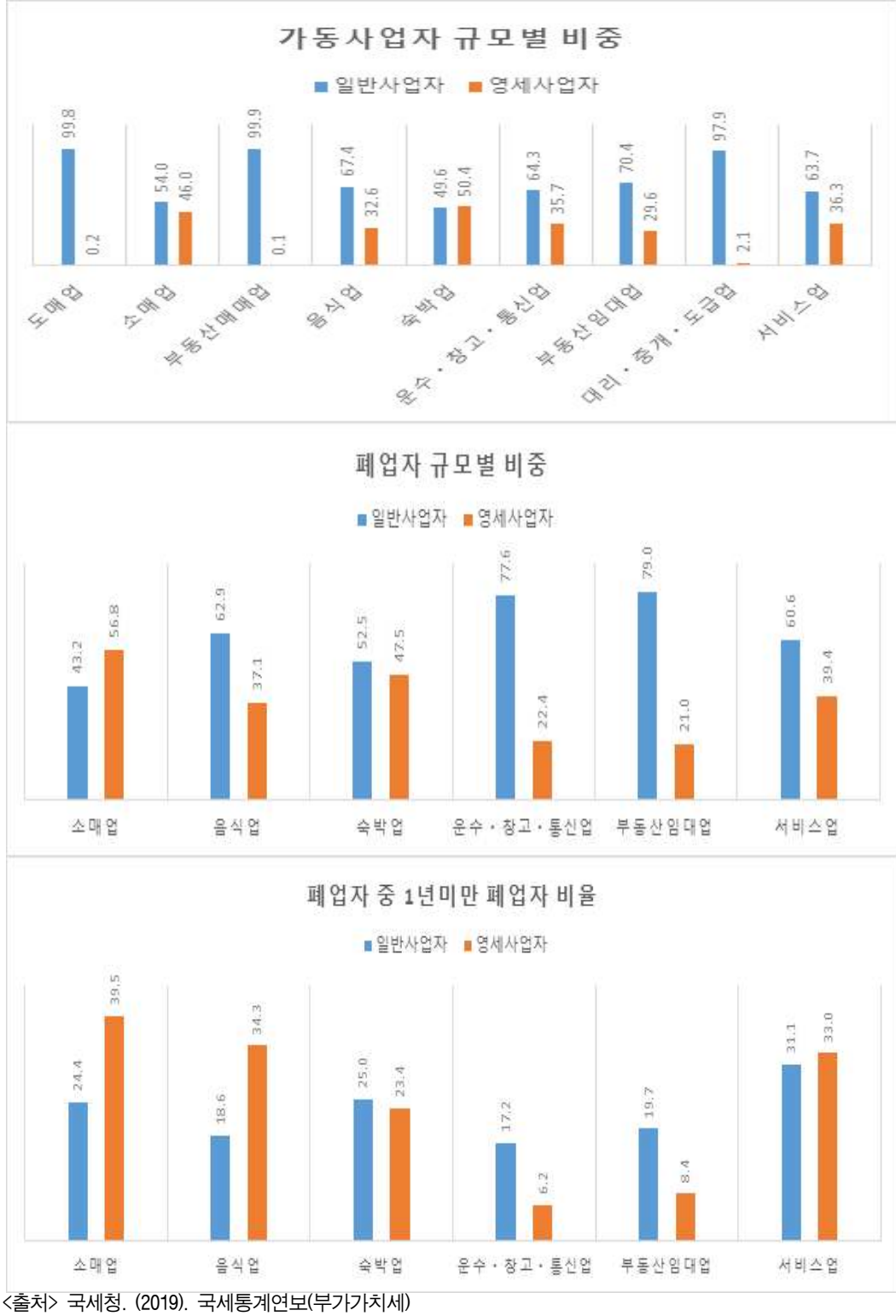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 **앞서 영세사업자일수록 일반사업자에 비해 폐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과 음식업에 진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2018년 업태별 가동사업자와 폐업자 비중 및 1년 미만 폐업자 비율(<그림 14>)를 보면,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에서 영세사업자일수록 사업한지 '1년 미만에 폐업'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확인된다.**[25] 소매업의 경우 가동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비중(54%)이 영세사업자 비중(46%)보다 높았으나 폐업자는 영세사업자 비중(56.8%)이 일반사업자(43.2%)보다 1.3배 수준으로 높았다. 폐업 전 영업 영속기

2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세사업자 수가 매우 적은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대리중개도급업은 통계적 유의미함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함.

간이 1년 미만인 자영업자 비율은 영세사업자 비율(39.5%)이 일반사업자 비율(24.4%)보다 1.6배 더 높았다. 음식업의 경우, 가동사업자나 폐업자 모두 일반사업자 비중이 영세사업자 비중보다 2배 수준으로 높았던 반면, 1년 미만 폐업자 비율에서는 오히려 영세사업자 비율(34.3%)이 일반사업자(18.6%)보다 높았다.

<그림 14> 2018년 규모별 가동사업자, 폐업자 비중 및 1년미만 폐업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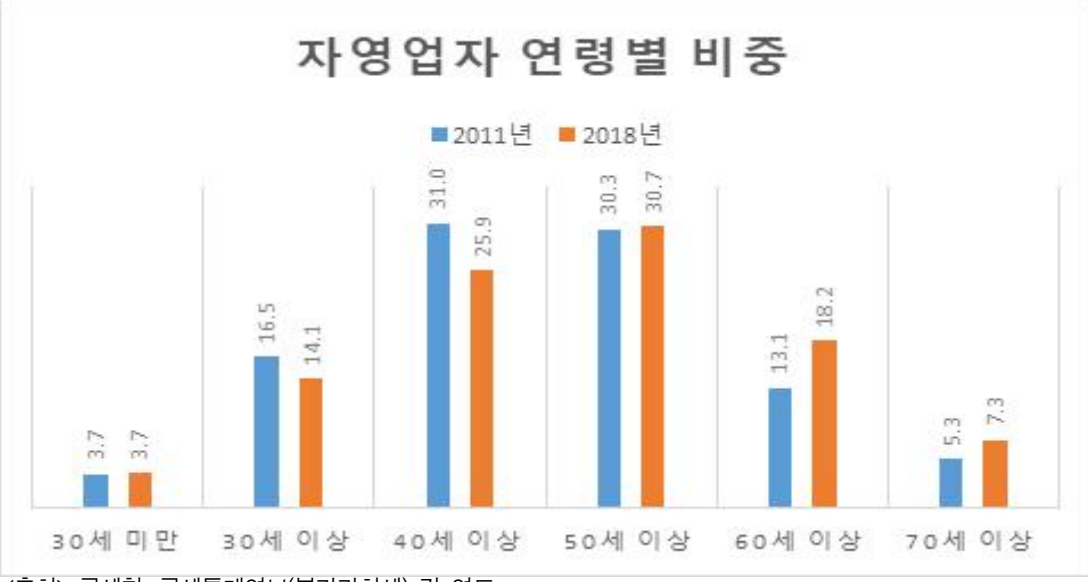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3) 자영업자 연령별(업태*연령별) 비중

* 연령별 자료는 2011년부터, 업태*연령별 자료는 2015년부터 존재함

- 시계열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를 연령별로 구분한 첫 데이터인 2011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그림 15>), 30대와 40대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합계 47.5%였는데, 2018년에는 40%로 약 7.5%p 감소했다. 반면 **50대와 60대 비중은 같은기간 43.4%에서 48.9%로 5.5%p 증가했다. 50대보다는 60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60대 인구가 2011년 대비 2018년 약 3.2%p 증가[26]했는데, 60대 자영업자가 같은기간 약 5.1%p 증가한 것은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는 추세 속에서 은퇴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 15>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2011, 2018) (단위: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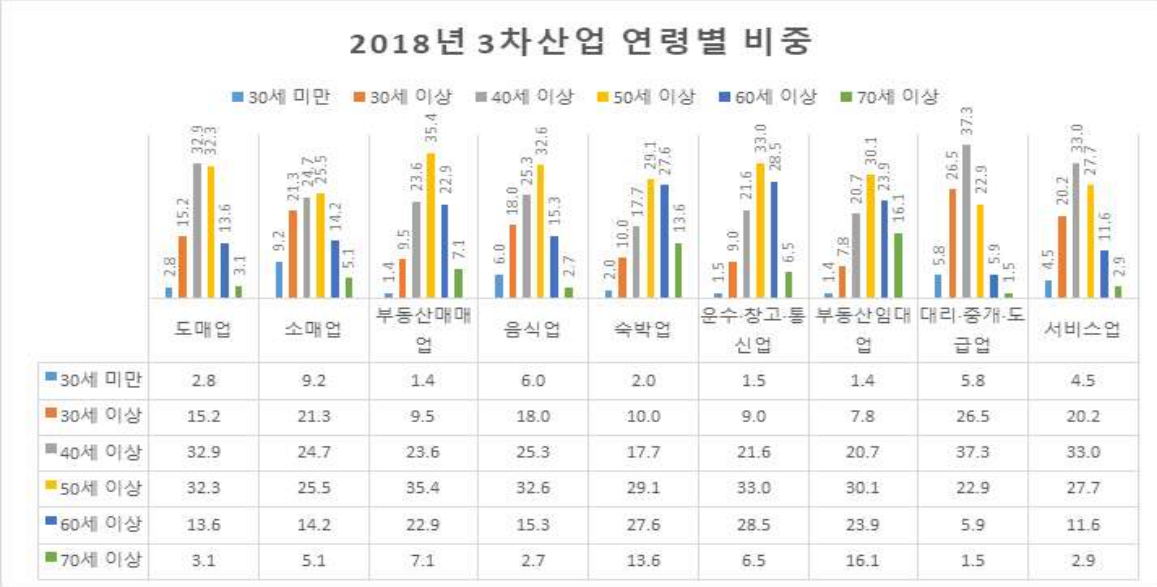
- 한편, 자영업자 업태*연령별 비중 자료(<그림 16>)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60세 이상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창고업, 부동산매매업" 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업태에서 대체로 4050 연령대가 중심인 것에 반해, 60세 이상과 7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 합이 숙박업의 경우 41.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0%, 운수창고업 31.7%, 부동산매매업 30%로 상당히 높았다. **해당 업태는 공통적으로 "부동산(건물)" 과 관련된 업태**로써, IF REPORT 2020-01 보고서[27]에서 지적했듯이 **거주주택 외에도 그 외 부동산 자산보유율이 높은 6~70대가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1, 2018)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인구 중 60대 비중은 8.3%였던 반면, 2018년 60대 비중은 11.5%로 약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대, 30대, 40대는 각각 0.1%p, 2.2%p, 1.1%p씩 감소했고, 50대는 1.8%, 70대는 1.3%p 증가함.

27) 김기식·주민지. (2020).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IF REPORT 2020-01. p.17

<그림 16> 2018년 3차산업 자영업 업태*연령별 비중 (단위: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중개·도급업	서비스업
30세 미만	2.8	9.2	1.4	6.0	2.0	1.5	1.4	5.8	4.5
30세 이상	15.2	21.3	9.5	18.0	10.0	9.0	7.8	26.5	20.2
40세 이상	32.9	24.7	23.6	25.3	17.7	21.6	20.7	37.3	33.0
50세 이상	32.3	25.5	35.4	32.6	29.1	33.0	30.1	22.9	27.7
60세 이상	13.6	14.2	22.9	15.3	27.6	28.5	23.9	5.9	11.6
70세 이상	3.1	5.1	7.1	2.7	13.6	6.5	16.1	1.5	2.9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3-1) 업태*연령별 폐·창업률

- 2018년 3차산업 업태 중 연령별 폐·창업률을 비교해보면, **고령층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았다**(<표 7>창업률-폐업률=음의 값). **이는 해당 업태에서 새로 생기는 사업자보다 망하는 사업자가 많은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특히 전국적으로 소매업과 음식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들고,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70세 이상 고령자의 소매업과 음식업 창업률이 높다(<표 8>). 이는 시장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과 음식업에 무리하게 창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표 7> 2018년 업태*연령별 창업률-폐업률 (단위: %p)

창업률-폐업률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도매업	25.6	9.6	2.8	0.2	-2.5	-1.3
소매업	33.7	13.1	4.8	1.8	-1.7	-7.9
부동산매매업	42.0	29.6	20.6	12.6	6.8	10.5
음식업	30.2	13.0	6.9	2.2	-1.9	-9.3
숙박업	27.7	14.5	9.0	5.8	1.2	-6.8
운수창고통신업	26.6	10.2	4.9	2.1	-1.1	-8.3
부동산임대업	36.3	24.8	18.7	13.0	6.7	1.5
대리중개도급업	32.7	11.0	8.3	7.1	5.0	7.8
서비스업	35.3	14.9	7.7	13.6	0.5	-4.3

※ 빨간색=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업태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참고) <표 8> 2018년 업태*연령별 창업률, 폐업률 (단위: %)

창업률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도매업	44.7	23.1	12.8	8.8	7.1	11.0
소매업	57.4	32.0	20.1	14.5	10.2	5.1
부동산매매업	57.7	44.6	34.1	25.0	17.5	21.9
음식업	52.2	33.7	25.7	18.5	13.7	9.6
숙박업	46.9	30.1	23.8	18.0	12.6	5.6
운수창고통신업	41.5	22.1	14.1	9.1	5.1	2.8
부동산임대업	44.6	31.7	24.9	18.8	11.7	7.1
대리중개도급업	56.5	30.4	25.4	24.1	22.1	26.4
서비스업	55.4	29.5	19.6	14.8	11.8	8.5

폐업률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도매업	19.0	13.5	10.0	8.6	9.6	12.3
소매업	23.7	18.9	15.3	12.7	11.9	13.0
부동산매매업	15.7	15.0	13.6	12.4	10.7	11.4
음식업	22.0	20.7	18.8	16.3	15.6	18.9
숙박업	19.2	15.6	14.8	12.2	11.4	12.4
운수창고통신업	14.9	11.9	9.3	7.0	6.2	11.1
부동산임대업	8.3	6.9	6.1	5.8	5.0	5.6
대리중개도급업	23.8	19.4	17.0	17.0	17.1	18.6
서비스업	20.1	14.7	11.9	11.2	11.3	12.8

* 위 <표 7>의 원자료임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 참고로,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폐업한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표 9>),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이 '1년 미만' 인 비율이 전체 평균 6.6%인데, 30대 이하는 12.5%로 연령대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30대 이하 소상공인 중 절반이상(55.2%)이 영업 영속기간이 대체로 3년미만에 불과했다. 이들은 폐업 이후 주로 취업 내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41.7%)으로 나타났다. **경험이나 도움 없이 창업한 젊은 창업인들이 그만큼 실패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청년을 대상으로 무조건 창업하게 한 후 지원하는 정책은 능사가 아니라는 시사점**을 준다. 한편, 40대,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폐업 전 영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고, 폐업 이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비율도 30대 이하보다 높았다.

<표 9> 2019년 폐업 소상공인 연령별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 및 폐업 이후 생활 (단위: %)

구분		사례수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전체		501	6.6	30.9	21.0	25.5	16.0
연령	30대 이하	96	**12.5**	**42.7**	22.9	19.8	2.1
	40대	215	6.0	38.6	23.3	22.8	9.3
	50대 이상	190	4.2	16.3	17.4	31.6	30.5

구분		사례수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같은 업종 재창업	계획 없음	휴식 중, 재창업 계획	휴식 중, 취업 계획	업종 변경 재창업	기타
전체		501	31.3	28.3	16.4	7.8	7.6	7.0	1.6
연령	30대 이하	96	**41.7**	22.9	13.5	8.3	4.2	7.3	2.1
	40대	215	29.8	**33.0**	14.0	7.4	7.9	6.5	1.4
	50대 이상	190	27.9	**25.8**	20.5	7.9	8.9	7.4	1.6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19.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표1, 표4 인

- **지표 2 – 상위 20개 생활밀접업종[28] 사업자 증감률** * 통계가 17년 하반기부터 작성됨

  - 2020년 1월 기준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생활업종 중 **전년동월(19년 1월) 대비 사업자 감소율이 높은 업종 7곳은 '호프전문점, 식료품가게, 노래방, 슈퍼마켓, 옷가게, 분식점, 화장품가게'였다. 반면 소매업 중에서도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커피음료점' 또한 높았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19년 1월 전국에 5만 2천여개로 100대 생활업종 중 9위권에 들었는데, 20년 1월 1년만에 6만 2천여개로, 약 18%가 증가하여 100대 생활업종 중 6위에 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도 대체로 동일했다.

  <표 10>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증감률 순위

연월	2020년 1월(전년 동월 대비)		2019년 1월(전년 동월 대비)	
순위	증가율 순	감소율 순	증가율 순	감소율 순
1	통신판매업(23.4%)	호프전문점(-5.7%)	커피음료점(16.9%)	식료품가게(-5.2%)
2	커피음료점(18.9%)	식료품가게(-3.2%)	통신판매업(14.9%)	호프전문점(-5.2%)
3	피부관리업(15.8%)	노래방(-3%)	피부관리업(14.4%)	노래방(-2.8%)
4	교습소공부방(12.8%)	슈퍼마켓(-2.5%)	실내장식가게(10.4%)	화장품가게(-2.5%)
5	실내장식가게(9.3%)	옷가게(-0.9%)	교습소공부방(8.3%)	옷가게(-2.4%)
6	패스트푸드점(7.8%)	분식점(-0.1%)	패스트푸드점(5.3%)	분식점(-2.1%)
7	편의점(6.6%)	화장품가게(-0.1%)	편의점(4.4%)	슈퍼마켓(-0.1%)
8	미용실(3.3%)	-	부동산중개업(3.9%)	-
9	부동산중개업(3.2%)	-	예술학원(3.5%)	-
10	자동차수리점(2.4%)	-	미용실(3.2%)	-

<출처> 국세청. 2019년과 2020년 1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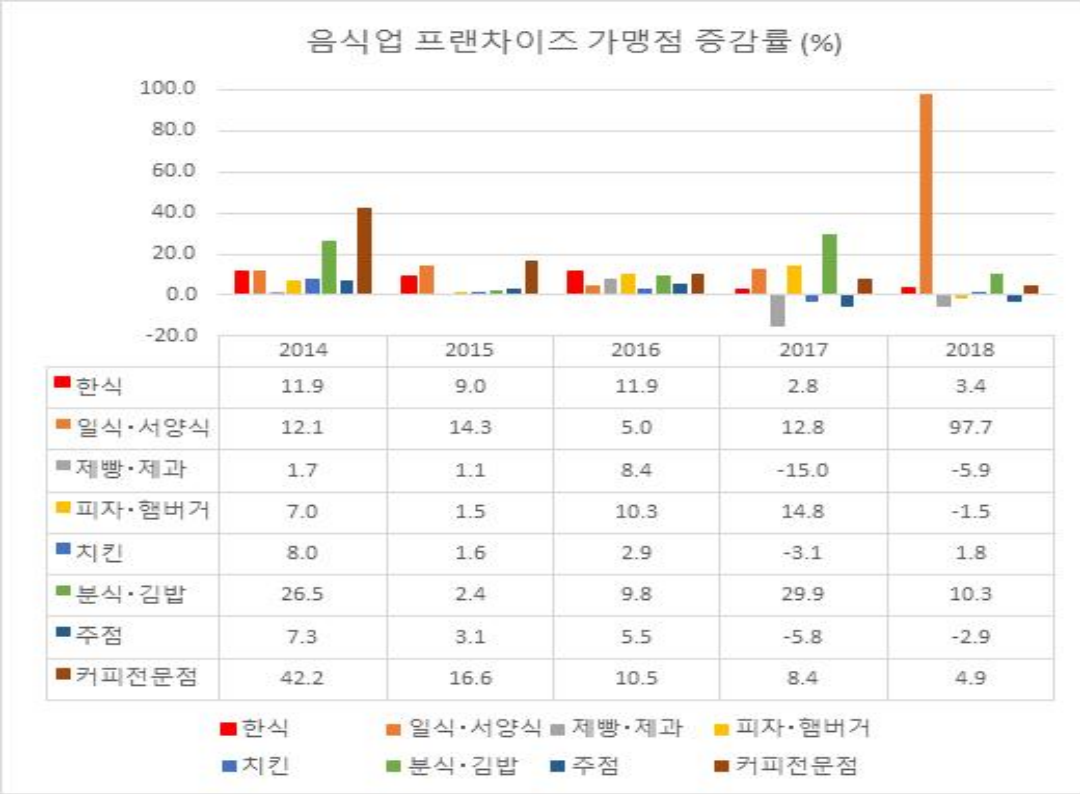
- **지표 3 – 음식업 분야 프랜차이즈 현황**

  - **한편, 지난 20년동안 자영업자 중 음식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 이후 자영업자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수를 제한함으로써 과잉 진입에 따른 사업 실패를 예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p.153)"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음식업 프랜차이즈의 증가는 소비자 선호는 물론, 입지 선정, 광고비 투자 등에서 일반 독립 자영업자에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가 유리한 면이 사업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요인에 따라 음식업 종사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내부 구성으로 보면 독립적인 자영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17>을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빵제과점, 피자·햄버거, 주점'을 제외하고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2014년 전년대비 무려 42%나 증가한 이후에도 매년 다른 음식업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맹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제빵, 피자·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있어서 90년대 말~200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업종으로 시장에서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8)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기타 업태 중 생활밀접업종만 분석한 자료임.

<그림 17> 2014~2018년 음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년비 증감률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한식	11.9	9.0	11.9	2.8	3.4
일식·서양식	12.1	14.3	5.0	12.8	97.7
제빵·제과	1.7	1.1	8.4	-15.0	-5.9
피자·햄버거	7.0	1.5	10.3	14.8	-1.5
치킨	8.0	1.6	2.9	-3.1	1.8
분식·김밥	26.5	2.4	9.8	29.9	10.3
주점	7.3	3.1	5.5	-5.8	-2.9
커피전문점	42.2	16.6	10.5	8.4	4.9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013~2018)

- 요약하면,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영업이 과잉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요인, 선진국의 경험과 같이 우리나라도 고속성장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국면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자영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 총 인구 감소와 함께 주력 소비세대인 2030 세대의 비중이 감소하는 요인 등에 의해 우리나라 자영업이 역사적으로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전반적인 자영업 현황통계를 통해 지난 20년동안 소매업이나 음식업 종사자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해당 업태 내에서도 특히 영세사업자의 몰락이 두드러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영세 소매, 음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칠 때, 대출 등을 통해 유지시키거나 동종업에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은퇴 이후의 6~70대 이상 고령자 층이 여전히 폐업률이 높은 도소매나 음식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 무리한 창업을 억제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자영업 대책에서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3.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분석

- **이하는 앞서 전국 현황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자영업 현황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석한 결과다.**

1) 지역별(업태*지역별) 비중

- 2018년 지역별 자영업 비중(<표 11>)을 보면, 경기, 서울 지역이 25.8%, 21.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역별 인구분포와 대체로 일치하는 수치(인구 비중: 25.2%, 18.8%)였다. 인구 비중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 지역(서울, 강원, 제주)이 유일했는데,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강원도는 인구 비중(0.3%)에 비해 자영업 비중(3%)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

<표 11> 2018년 지역별 인구 및 자영업 비중 (단위: %)

순위	지역	인구 비중
1	경기	25.2
2	서울	18.8
3	부산	6.6
4	경남	6.5
5	인천	5.7
6	경북	5.2
7	대구	4.8
8	충남	4.1
9	전남	3.6
10	전북	3.5
11	충북	3.1
12	대전	2.9
13	광주	2.8
14	울산	2.2
15	제주	1.3
16	세종	0.6
17	강원	0.3
합계		100

순위	지역	자영업 비중
1	경기	25.8
2	서울	21.2
3	부산	6.4
4	경남	6.1
5	인천	5.5
6	경북	4.8
7	대구	4.4
8	충남	3.9
9	전북	3.4
10	전남	3.4
11	강원	3.0
12	충북	2.9
13	대전	2.6
14	광주	2.5
15	울산	1.9
16	제주	1.6
17	세종	0.6
합계		10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 이하 <표 12>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인구 비중이 늘어난 곳에서 자영업 비중이 늘었으며, 인구 비중이 줄어든 곳에서 자영업 비중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구와 자영업 비중이 감소해 왔는데, **인구 비중 감소폭에 비해 자영업 비중 감소폭이 큰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대전, 충북(파란색 표시)' 이었고, 인구 비중 감소폭에 비해 자영업 비중 감소폭이 적은 곳은 '강원, 경북, 전남, 전북, 광주(빨간색 표시)'** 였다. 전자로 언급된 지역은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인 반면에, 후자로 언급된 지역은 대체로 농촌지역이 많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였다.

<표 12> 지역별 인구 비중과 자영업 비중 감소폭 비교(1998, 2008, 2018) (단위: %)

증감 순위	지역	18년 98년 비교 (%p)	인구 비중		
			1998	2008	2018
1	경기	6.8	18.5	22.8	25.2
2	인천	0.4	5.3	5.4	5.7
3	제주	0.2	1.1	1.1	1.3
4	울산	0.1	2.2	2.2	2.2
5	충남	0.0	4.1	0.4	4.1
6	대전	0.0	2.9	3.0	2.9
7	경남	0.0	6.5	6.5	6.5
8	광주	0.0	2.9	2.9	2.8
9	충북	-0.1	3.2	3.1	3.1
10	대구	-0.6	5.3	5.0	4.8
11	전북	-0.7	4.3	3.7	3.5
12	경북	-0.8	6.0	5.4	5.2
13	전남	-1.0	4.6	3.9	3.6
14	부산	-1.5	8.1	7.2	6.6
15	강원	-3.0	3.3	3.0	0.3
16	서울	-3.0	21.9	20.6	18.8
-	세종	-	-	-	0.6
-	합계	-	100	100	100

증감 순위	지역	18년 98년 비교 (%p)	자영업 비중		
			1998	2008	2018
1	경기	9.5	16.3	22.9	25.8
2	인천	1.4	4.1	5.2	5.5
3	제주	0.4	1.2	1.2	1.6
4	울산	0.1	1.8	1.9	1.9
5	충남	0.0	3.9	3.9	3.9
6	광주	-0.1	2.6	2.6	2.5
7	전북	-0.3	3.7	3.3	3.4
8	전남	-0.3	3.7	3.4	3.4
9	경북	-0.4	5.2	4.9	4.8
10	충북	-0.5	3.4	2.9	2.9
11	강원	-0.5	3.5	3.2	3
12	대전	-0.6	3.2	2.9	2.6
13	경남	-0.6	6.7	6.2	6.1
14	대구	-1.3	5.7	4.8	4.4
15	부산	-2.4	8.8	6.9	6.4
16	서울	-5.0	26.2	23.7	21.2
-	세종	-	-	-	0.6
-	합계	-	100	100	100

* 자영업 비중 감소속도가 더 큰 곳은 파란색 표시, 인구 비중 감소속도가 더 큰 곳은 빨간색 표시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 앞서 전국 현황에서 자영업 업태 중 가장 몰락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진단된 소매업, 음식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비중을 보면(<표 13>), 2018년 기준 자영업 중 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상위 세 지역은 전북(16.1%), 전남(15.6%), 광주(15.2%)였고, 음식업 비중이 높은 상위 세 지역은 강원(16.1%), 경북(14.4%), 울산(14.3%)이었다. 모두 수도권에 비해 인구 비중이 높지 않은 '도 지역'이었다. 또한 2008년 대비 2018년 자영업 중 소매업 자영업자 비중 감소폭을 보면 전국 평균이 1.9%p 였는데, 그 이상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전남(4.5%p), 제주(4.3%p), 강원(4.0%p) 순이였다. 같은 기간 자영업 중 음식업 자영업자 비중 감소폭을 보면, 전국 평균은 1.7%p 였는데, 그 이상으로 감소폭이 컸던 곳은 강원(2.4%p), 제주(2.4%p), 경북(2.3%p) 순이었다. 이 역시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한 '도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급이 과잉되었던 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매업과 음식업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자영업 중 소매업과 음식업 비중 감소폭 비교(2008, 2018) (단위: %p)

증감 순위	지역	08년 18년 비교 (%p)	소매업 비중	
			2008	2018
1	전남	△4.5%p	20.1	15.6
2	제주	△4.3%p	17.2	12.9
3	강원	△4.0%p	18.9	14.9
4	전북	△3.9%p	20.0	16.1
5	충남	△3.4%p	18.1	14.7
6	경북	△3.2%p	18.7	15.5
7	충북	△3.2%p	17.6	14.4
8	경남	△2.3%p	16.0	13.7
-	전국	△1.9%p	14.9	13.0
9	부산	△1.7%p	15.5	13.8
10	광주	△1.6%p	16.8	15.2
11	대구	△1.6%p	16.1	14.5
12	인천	△1.6%p	13.9	12.3
13	대전	△1.5%p	15.9	14.4
14	경기	△1.5%p	12.9	11.4
15	울산	△1.4%p	14.8	13.4
16	서울	△0.8%p	12.5	11.7

증감 순위	지역	08년 18년 비교 (%p)	음식업 비중	
			2008	2018
1	강원	△2.4%p	18.5	16.1
2	제주	△2.4%p	16.5	14.1
3	경북	△2.3%p	16.7	14.4
4	전남	△2.2%p	15.3	13.1
5	경기	△2.2%p	10.8	8.6
6	충남	△2.1%p	15.1	13.0
7	인천	△2.0%p	11.3	9.2
8	전북	△1.7%p	13.2	11.5
-	전국	△1.7%p	12.3	10.6
9	경남	△1.6%p	15.5	13.9
10	울산	△1.5%p	15.9	14.3
11	충북	△1.5%p	15.4	13.9
12	서울	△1.2%p	9.6	8.4
13	대구	△1.0%p	12.3	11.3
14	광주	△0.9%p	12.6	11.7
15	부산	△0.8%p	11.8	11.0
16	대전	△0.7%p	12.5	11.8

* 동일한 차이면 2008년 해당 업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을 높은 순위로 함

** 전국 평균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2) 규모별(업태*규모별) 비중[29]

- 지역별 자영업 중 영세업자 비중(<표 14>)을 보면, **영세업자 비중이 높은 상위 7개 지역이 모두 '도 지역' 이었다. 특히 강원도는 자영업자의 37.4%가 영세업자로 영세업자 비중에서 전국 1위**였다. **반면 자영업 중 영세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27.5%)보다 낮은 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였다.
- **한편, 지난 10년간 영세업자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제주(22.3%p 감소)였으며, 이후 전북, 전남 순이었다. 이러한 지역은 기존에 영세업자 비중이 대부분 50% 이상으로 높았던 지역**이었다. 반대로 영세업자 비중 감소폭이 적은 서울, 대구, 울산 지역은 기존에도 영세업자 비중이 50%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업자 비중이 적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그 비중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9) 앞서 설명한 것(p.15, 각주 21)과 마찬가지로, 규모별 분석에서 면세사업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표 14> 지역별 영세업자 비중 및 영세업자 비중 감소폭 변화 비교(2008, 2018) (단위: %, %p)

순위	지역	영세업자 비중 (2018)
1	강원	37.4
2	경북	35.2
3	충북	34.5
4	대전	33.3
5	전남	33.0
6	울산	33.0
7	경남	32.9
8	제주	32.8
9	전북	32.8
10	광주	32.4
11	충남	31.8
12	대구	31.0
13	부산	29.4
-	전국	27.5
14	인천	24.5
15	서울	24.4
16	경기	22.7
17	세종	17.4

증감 순위	지역	08년 18년 비교 (%p)	영세업자 비중	
			2008	2018
1	제주	△22.3%p	55.1	32.8
2	전북	△17.6%p	50.4	32.8
3	전남	△17.5%p	50.6	33.0
4	충남	△15.9%p	47.7	31.8
5	강원	△15.9%p	53.3	37.4
6	충북	△14.5%p	49.0	34.5
7	경북	△13.4%p	48.6	35.2
8	인천	△12.4%p	36.9	24.5
-	전국	△12.3%p	39.8	27.5
9	대전	△12.2%p	45.4	33.3
10	광주	△12.0%p	44.4	32.4
11	경기	△11.7%p	34.4	22.7
12	부산	△10.7%p	40.1	29.4
13	경남	△10.7%p	43.6	32.9
14	울산	△10.5%p	43.5	33.0
15	대구	△10.5%p	41.5	31.0
16	서울	△9.0%p	33.4	24.4
17	세종	비교불가	-	17.4

* 전국 평균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 소매업과 음식업에서의 지역별 영세업자 비중(<표 15>)을 보면, 먼저 소매업의 경우 전남(50.7%), 전북(49.9%), 경남(49.7%), 부산(48.8%), 광주(48.2%) 순으로 영세업자 비중이 높았다. 음식업은 경북(47%), 충북(41.7%), 전남(41%), 전북(40.8%), 강원(40.4%), 경남(39.1%) 순으로 영세업자 비중이 높았다. **소매·음식업 분야에서 영세업 중심으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볼 때, 특히 전남·북, 경남·북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영세업의 몰락이 예상**된다.

<표 15> 2018년 지역별 소매업, 음식업 영세업자 비중 (단위: %)

소매업		
순위	지역	영세업 비중
1	전남	50.7
2	전북	49.9
3	경남	49.7
4	부산	48.8
5	광주	48.2
6	인천	47.8
7	경북	47.6
8	대구	47.5
9	울산	47.3
10	강원	46.5
11	대전	46.4
-	전국	46.0
12	충북	46.0
13	충남	45.3
14	세종	44.5
15	경기	44.1
16	서울	42.8
17	제주	41.3

음식업		
순위	지역	영세업 비중
1	경북	47.0
2	충북	41.7
3	전남	41.0
4	전북	40.7
5	강원	40.4
6	경남	39.0
7	충남	37.9
8	대구	37.6
9	대전	33.5
10	울산	32.8
-	전국	32.6
11	부산	32.3
12	제주	31.3
13	광주	30.9
14	세종	30.9
15	인천	29.3
16	경기	26.9
17	서울	21.5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3) 연령별(연령*규모별) 비중

* 참고로 업태*연령*지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함

- 앞서 전국 현황에서 보았듯이, 자영업 연령별 비중은 40~50대가 두텁고(각 25.9%, 30.7% 차지), 40세 미만(17.8%), 60세 이상(25.5%)으로 갈수록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6>). 이러한 **전국 평균에 비해,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지역**이었다. **앞서 전국 업태*연령별 현황에서, 고령층일수록 부동산임대·매매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등에서의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 부산, 강원 지역은 특히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고령층이 자영업을 활발히 하는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40세 미만의 **젊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울산, 제주' 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2018년 지역별 자영업 연령별 비중 (단위: %)

	자영업 비중	~40세 미만	40~50대	60세 이상~	합계
전국	100	17.8	56.6	25.5	100
경기	25.8	18.0	58.7	23.2	100
서울	21.2	18.5	51.4	30.1	100
부산	6.4	17.6	53.5	29.0	100
경남	6.1	16.8	59.0	24.2	100
인천	5.5	19.0	57.0	24.0	100
경북	4.8	16.0	59.0	24.9	100
대구	4.4	18.2	57.1	24.7	100
충남	3.9	17.3	58.0	24.6	100
전북	3.4	16.8	58.2	24.9	100
전남	3.4	16.1	58.8	25.1	100
강원	3.0	15.1	57.7	27.2	100
충북	2.9	16.7	59.0	24.3	100
대전	2.6	18.5	57.3	24.3	100
광주	2.5	20.0	59.0	21.0	100
울산	1.9	18.0	58.6	23.4	100
제주	1.6	18.7	59.4	21.9	100
세종	0.6	21.2	61.3	17.5	100

* 40세 미만은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의 합, 60세 이상은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합

** 60세 이상 중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빨간색 표시, 40세 미만 중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파란색 표시

*** 자영업 비중 높은 순으로 정렬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 한편, 고령층을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 구분할 때,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층 자영업자 중 영세업자 비중이 높았다(<표 17>).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 영세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 전남, 대전' 이다.** 앞서 자영업자 중 고령층 비중이 높은 상위 세 지역이 '서울, 부산, 강원' 이었는데, **서울과 부산의 고령층 자영업자는 대체로 영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반면 강원의 고령층 자영업자는 대체로 영세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업자의 구조적 몰락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강원 지역의 고령층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17> 2018년 지역별 6,70세 이상 자영업자 중 영세업자 비중 (단위: %)

순위	지역	60세 이상	순위	지역	70세 이상
1	강원	48.5	1	강원	65.9
2	광주	47.2	2	전남	64.4
3	충북	46.1	3	대전	63.8
4	경북	46.0	4	충북	63.5
5	대전	45.8	5	경북	63.5
6	울산	44.4	6	광주	63.4
7	전남	44.2	7	울산	62.6
8	경남	43.3	8	경남	61.3
9	제주	43.1	9	전북	59.3
10	전북	42.7	10	충남	59.0
11	충남	42.3	11	대구	57.7
12	대구	42.0	12	제주	52.8
13	부산	37.8	13	부산	52.6
-	전국	36.6	-	전국	48.8
14	인천	32.2	14	인천	45.7
15	서울	31.7	15	경기	40.5
16	경기	29.1	16	서울	39.2
17	세종	22.4	17	세종	38.1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4) 업태별 폐·창업률

- 마지막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네 업태(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지역별 폐업률과 창업률 현황이다.
  - 먼저 소매업의 경우(<표 19, p.31>),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창업률이 높은 곳은 주로 광역시, 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수도권, 대전, 세종, 광주, 울산)였다. 창업률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폐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런데 **영남권인 '대구, 부산, 경남'의 경우, 창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매업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창업률과 폐업률 차이가 1%p 미만으로 창업한 만큼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 소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음식업의 경우에도(<표 20, p.31>) 소매업에서처럼 주로 대도시에서 창폐업이 활발했다. **창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했다. 창업률과 폐업률 차이도 1.5%p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전남 지역에서 소매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업 종사자들이 상황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전남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2030 세대 비중이 가장 낮았다(<표 18>).[30]

30)

<표 18> 2018년 지역별 2030 세대 비중 (%)

순위	지역	2030 세대 비중
1	서울	30.7
2	세종	29.4
3	인천	28.5
4	대전	28.4
5	경기	28.3
6	광주	27.8
7	울산	27.7
-	**전국**	**27.2**
8	대구	26.4
9	부산	26.1
10	충북	25.4
11	제주	25.4
12	충남	25.3
13	경남	24.8
14	강원	23.2
15	전북	23.2
16	경북	23.1
17	**전남**	**21.9**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

<표 19> 2018년 소매업 지역별 폐·창업률 및 창업률-폐업률 (단위: %, %p)

권역	지역	소매업		
		폐업률	창업률	창업률-폐업률(%p)
전국		15.7	22.5	6.8
수도권	서울	16.0	24.2	8.2
	경기	16.4	25.2	8.8
	인천	16.8	25.3	8.5
강원	강원	13.4	16.5	3.1
충청권	대전	16.8	23.1	6.3
	세종	16.4	30.1	13.7
	충북	14.3	19.4	5.1
	충남	14.1	19.4	5.3
호남권	광주	17.4	24.1	6.7
	전북	15.4	21.1	5.7
	전남	15.7	16.6	**0.9**
제주	제주	13.4	19.7	6.3
영남권	대구	**15.8**	22.2	6.4
	부산	**16.2**	21.9	5.7
	울산	17.3	23.5	6.2
	경북	14.4	18.5	4.1
	경남	**16.1**	21.9	5.8

* 전국 평균보다 폐업률이 높은 수치는 파란색 표기, 창업률이 높은 수치는 빨간색 표기, 이하 동일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표 20> 2018년 음식업 지역별 폐·창업률 및 창업률-폐업률 (단위: %, %p)

권역	지역	음식업		
		폐업률	창업률	창업률-폐업률(%p)
전국		18.1	24.2	6.1
수도권	서울	17.7	22.2	4.5
	경기	18.8	25.9	7.1
	인천	19.2	26.2	7
강원	강원	16.8	21.5	4.7
충청권	대전	19.1	25.2	6.1
	세종	18.7	33.9	15.2
	충북	18.1	24.6	6.5
	충남	17.9	24.4	6.5
호남권	광주	20.7	28.3	7.6
	전북	18.3	24.3	6
	전남	**20.5**	22.0	**1.5**
제주	제주	17.6	28.2	10.6
영남권	대구	17.9	24.0	6.1
	부산	17.6	23.2	5.6
	울산	18.7	24.7	6
	경북	17.2	22.3	5.1
	경남	17.6	23.2	5.6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표 21, p.32>), 자영업 전체 업태 중에 가장 상황이 좋은 업종이다. 창업률이 높은 반면, 폐업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창업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자의 부동산 자산 보유가 많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폐업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이 유일했다.**

<표 21> 2018년 부동산임대업 지역별 폐·창업률 및 창업률-폐업률 (단위: %, %p)

권역	지역	부동산임대업		
		폐업률	창업률	창업률-폐업률(%p)
전국		5.8	17.5	11.7
수도권	서울	5.3	18.1	12.8
	경기	7.1	20.5	13.4
	인천	6.3	21.7	15.4
강원	강원	6.0	15.8	9.8
충청권	대전	4.7	13.2	8.5
	세종	6.0	18.4	12.4
	충북	4.9	11.8	6.9
	충남	5.5	14.4	8.9
호남권	광주	5.3	16.0	10.7
	전북	4.4	13.0	8.6
	전남	4.8	14.9	10.1
제주	제주	5.2	17.3	12.1
영남권	대구	4.6	13.0	8.4
	부산	4.9	15.5	10.6
	울산	3.6	11.6	8
	경북	4.5	12.2	7.7
	경남	4.9	15.5	10.6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경우(<표 22>)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세종시를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창업이 활발하지 않을뿐더러 폐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창업률은 같거나 낮은 반면, 폐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표 22> 2018년 서비스업 지역별 폐·창업률 및 창업률-폐업률 (단위: %, %p)

권역	지역	서비스업		
		폐업률	창업률	창업률-폐업률(%p)
전국		12.6	20.6	8
수도권	서울	12.4	19.3	6.9
	경기	12.9	23.7	10.8
	인천	13.7	22.6	8.9
강원	강원	11.4	17.2	5.8
충청권	대전	13.0	19.5	6.5
	세종	13.6	30.6	17
	충북	12.4	19.6	7.2
	충남	12.3	20.4	8.1
호남권	광주	12.8	20.6	7.8
	전북	11.7	18.0	6.3
	전남	13.1	18.6	5.5
제주	제주	11.2	20.4	9.2
영남권	대구	12.1	19.5	7.4
	부산	12.8	18.8	6
	울산	14.4	19.8	5.4
	경북	12.0	18.1	6.1
	경남	12.8	18.8	6

<출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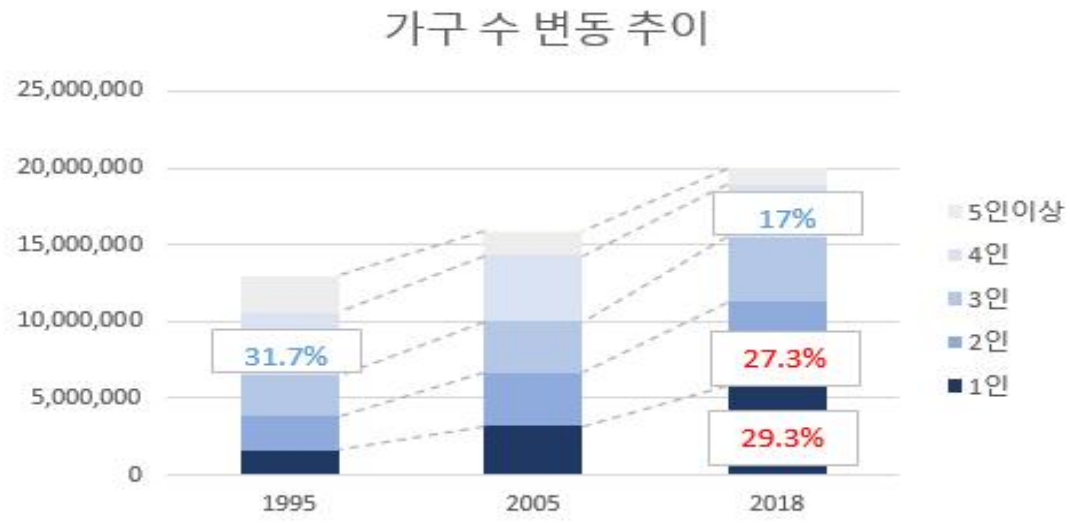
3. 이후 자영업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 분석

- 자영업 비율이 줄어들고 소매업,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자영업 중 비중이 높았던 업태의 종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앞서 지적했듯이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 및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같은 음식업, 소매업 내에서도 '가구 구조의 변화, 온라인 시장의 확대, 소비방식의 변화'라는 상호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성장하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각각의 요인에 의해 자영업의 몰락과 양극화가 어떤 양태로,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가구 구조의 변화

- 먼저, 전통적인 4인가구 중심의 가구 구조가 1, 2인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 구조의 변화로 1, 2인가구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포장·소용량'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업태와 '배달업' 등 1인가구에 맞는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반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먼저, 우리나라 가구는 기존 3, 4인 가구 비중이 높았던 것에서 점점 1, 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넘어섰다.
    - 단적으로 199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그림 18>), 95년에는 1, 2인가구 합이 30% 미만(1인가구: 12.7% 2인가구: 16.9%)이었던 반면, 3, 4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51% 이상(3인가구: 20%, 4인가구: 31%)을 차지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1, 2인가구 합이 전체 가구의 56%(1인가구: 29.3%, 2인가구: 27.3%)를 넘었다. 반면, 3, 4인 가구 합은 38%(3인가구: 21%, 4인가구: 17%)로 95년 3~4인 가구와 비교하면 약 18%p 감소했다.

<그림 18> 가구 수 변동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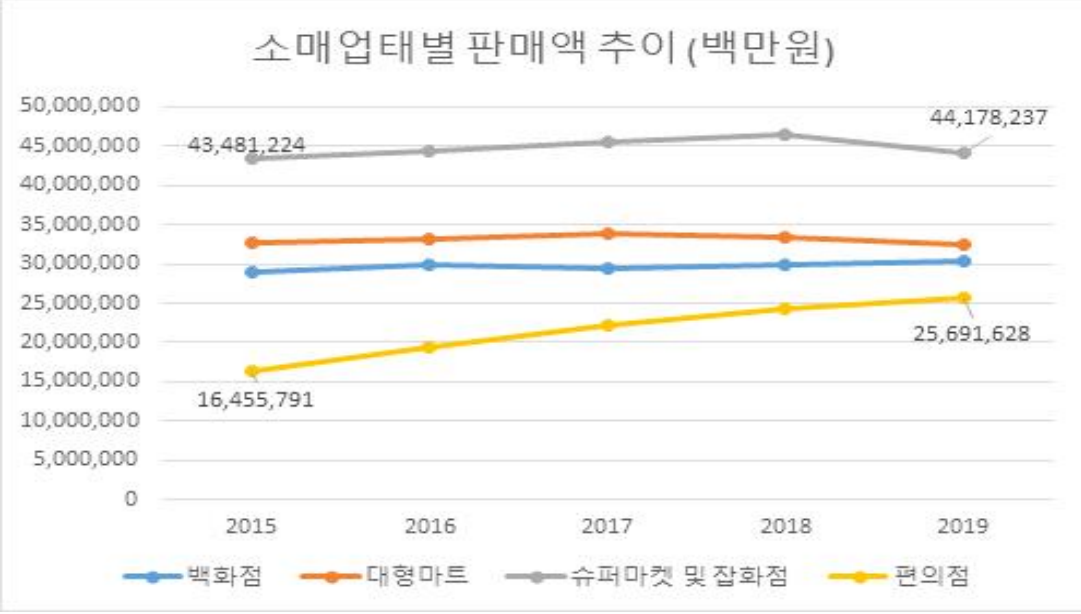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각연도)-가구원수별 가구

- 1, 2인가구는 특성상 다른가구에 비해 '혼밥' 비율이 높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세끼 모두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31]했다. 이에 따라 1인분 식사 준비에 따르는 소위 '소포장·소용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HMR)'에 대한 수요[32]가 늘어나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제공하는 소매업태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 그 대표적 사례가 편의점이다. 기존에 3, 4인가구에서처럼 대량구매가 갖는 장점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소매업인 일반 대형마트나 백화점, 슈퍼마켓의 매출액은 판매액 정체기(판매율 증감률 0%대)를 겪고 있다(<그림 19>). 반면에 편의점 매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단적으로 2019년 기준 전년대비 슈퍼마켓 및 잡화점 매출은 -4.9%로 크게 감소한 반면, 편의점 매출은 5.3% 증가해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림 19>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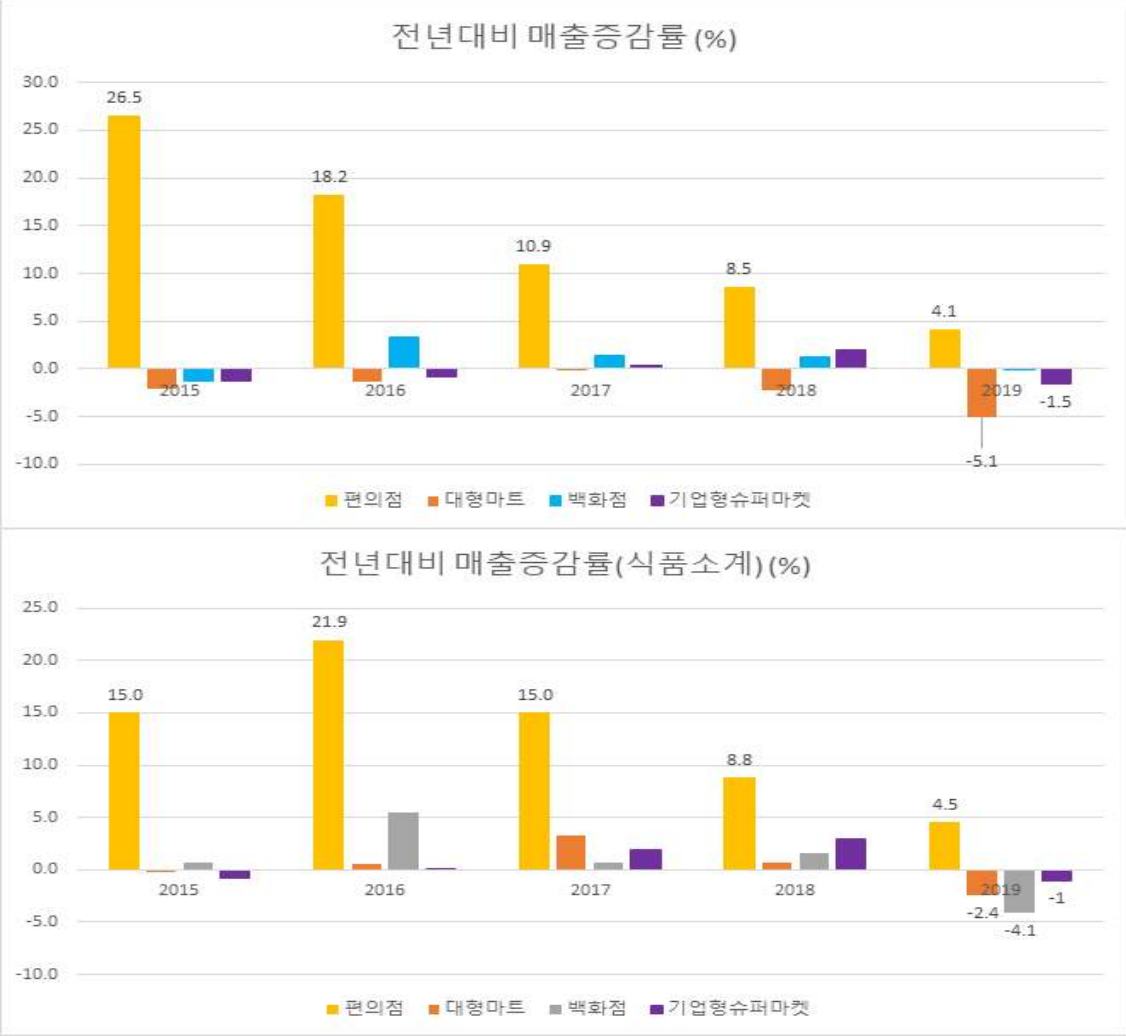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2015~2019 소매업태별 판매액)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그림 20>)에서도 지난 5년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편의점 매출은 매해 증가한 반면, 나머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예_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은 대체로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거나 매출 증가율이 5%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 이래로 편의점은 총 매출 증가율보다 식품에서의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31) 경향신문. (2017.5.16.)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5161652001#c2b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 7,000억원에서 2018년 3조 2,000억원으로 뛰었고, 2019년에는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2년 시장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뉴스웨이. (2020.5.6.) http://newsway.co.kr/news/view?tp=1&ud=2020042815582038438)

<그림 20> 2019년도 소매업태 전년대비 매출액 증감률 (총계 및 식품소계) (단위: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조사(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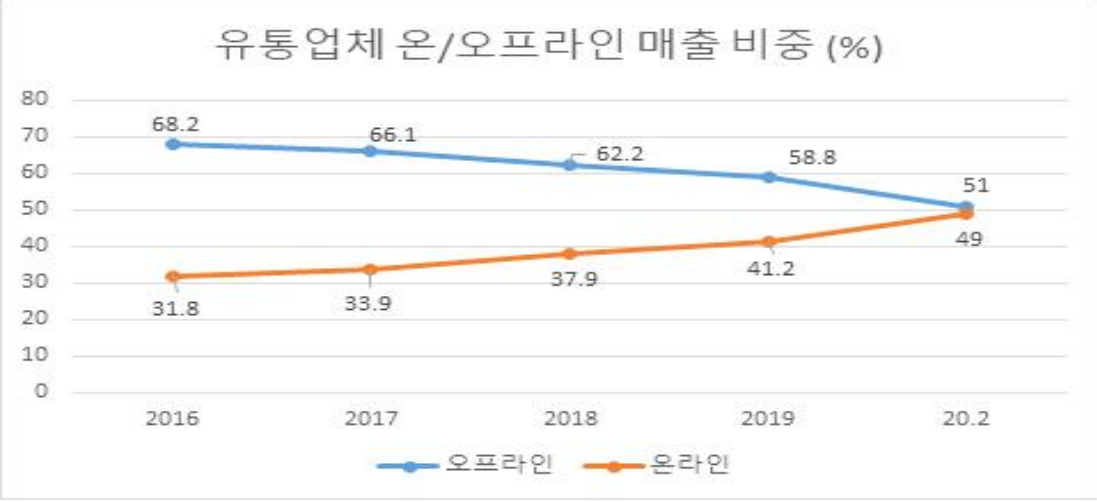
- 한편 1, 2인가구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측면에서는 헬스케어를 비롯해 개인 여가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와 관련해 한국콘텐츠미디어가 작성한 주소록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헬스장 6,978곳, 요가학원 1,900곳이었는데 5년만인 2020년 3월 기준으로는, 헬스장이 10,299곳, 요가학원 3,181곳으로 각 47%, 67%씩 늘었다. 여가생활과 관련해서는, KB 경영연구소의 2019년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약 73%가 평일 중 바로 귀가하지 않고 다른 곳에 들르는데 특히 20~40대는 그 이유를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로 답했다. 1인가구 소비지출액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8%로 가장 높았는데, 식비(1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가·쇼핑(10.1%)"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가구 증가로 배달업에 대한 수요도 전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민족(앱)'과 같은 배달업종의 성장이다. 이는 비단 1인가구 증가 요인뿐만 아니라 앱사용과 간편결제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소비방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33) 정인·강서진.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가구 연구센터. (1인가구 보고서는 2019년 4월, 만 25~59세 1인가구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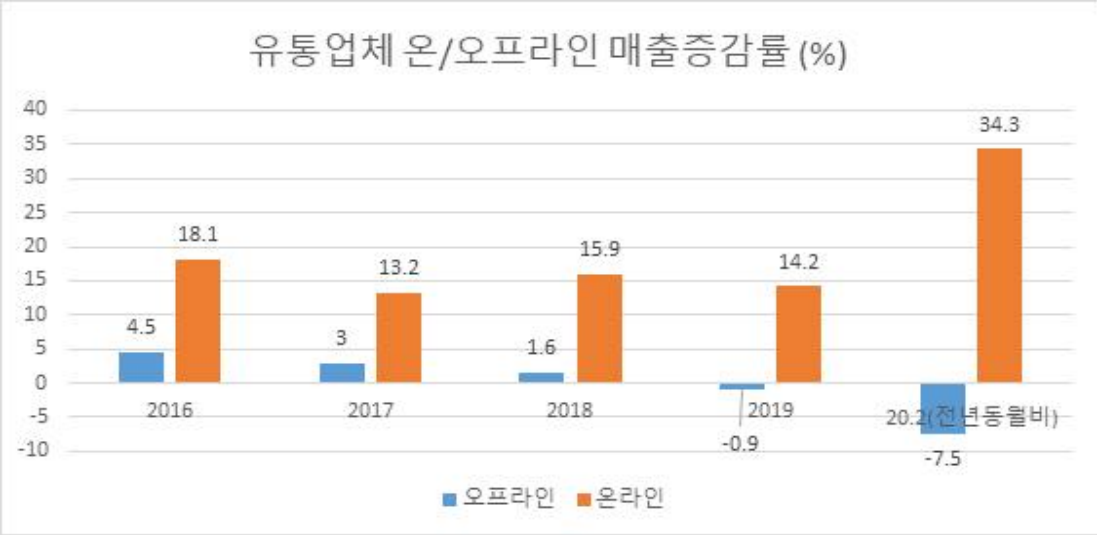
2. 온라인 시장 확대

- **둘째, 전체 유통업 시장에서 온라인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는 구조 또한 온라인시장을 활용하는 업종은 성장시키는 반면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업은 몰락하는 양극화의 원인이다.**
  - 주요 유통업체의 연간 매출 동향을 보면, 오프라인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그림 21>을 보면,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6년 31% 수준에서 2019년 41.2%로 약 11%p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 2월에는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5:5로 거의 같아졌다. 매출 증감률로 보아도 온라인 매출은 매해 10% 이상 증가하는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매해 5% 미만 증가율을 보이다 2019년에는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했다. 올 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7.5% 매출을 기록했다.
    - e-커머스 업계에서 " '사스는 알리바바를 키웠고, 메르스는 쿠팡을 키웠다' "[34]는 말은 이미 유명한 말이다. 2003년 사스 당시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전년비 5배 이상을 기록하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쿠팡의 매출이 3천억원대에서 1조원대[35]가 되는 등 감염병으로 수혜를 보는 업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 매출 비중과 거의 같아진 현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추세적으로도 오프라인 유통업 비중이 점점 줄어온 데다가 연령대 중 인터넷쇼핑 이용률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중장년층 소비자의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증가[36]하는 등의 추세를 볼 때, 코로나사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유통업체 온라인/오프라인 매출 비중 및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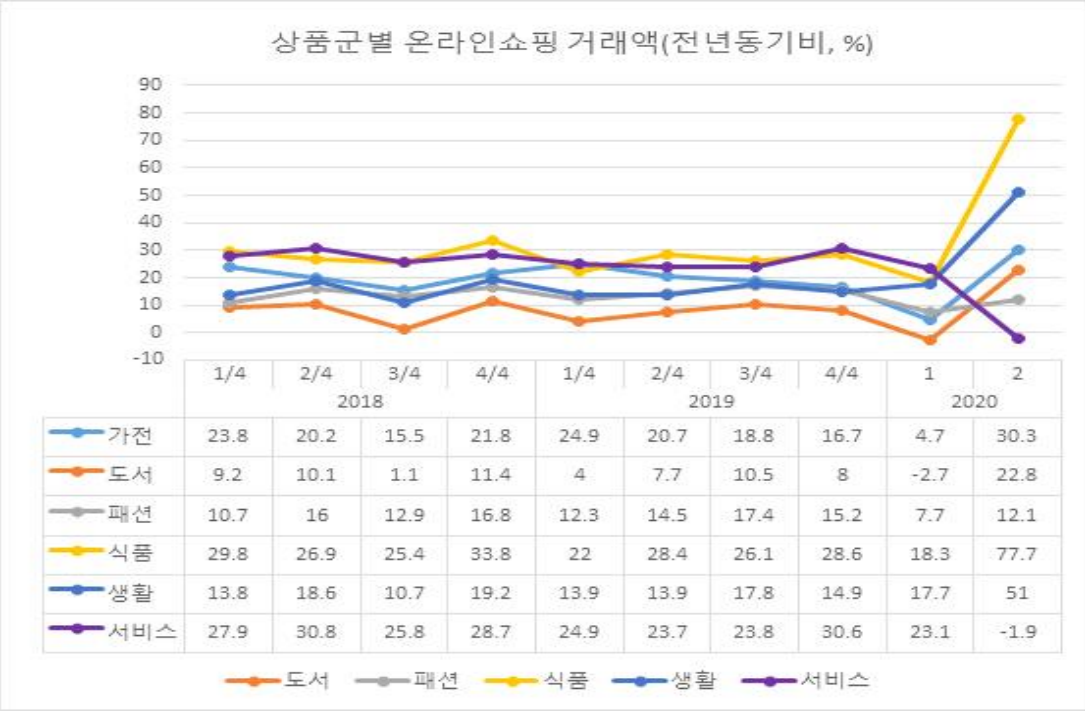
34) 전자신문. (2020.2.27.) https://m.etnews.com/20200227000191
35) 전자신문. (2020.2.27.) https://m.etnews.com/20200227000191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와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2019년 인터넷쇼핑 이용률(최근 1년 내 인터넷쇼핑 이용자를 일컬음)은 53.6%에서 64.1%로 10.5%p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구매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40대와 50대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2015년에 40대 57.6%, 50대 29.8%에서 4년뒤인 2019년 71.6%, 44.1%로 각각 14%p, 14.3%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각 연도

- 이렇게 전반적으로 온라인쇼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품군 중에서 매해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식품(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과 '서비스(여행 및 교통, 문화, e쿠폰, 음식서비스 등)' 품목이다. 이하 <그림 22>에서 보듯, 식품은 매 분기마다 전년동기비 30% 이상의 거래액 증가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비중이 줄어들면서 온라인쇼핑 상에서 식품군에 대한 거래액은 매우 큰 폭(77.7%)으로 증가했다. 한편 서비스 품목은 매 분기 성장세를 보이다 이번 2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여기서 서비스 품목은 서로 이질적인 품목이 섞여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23>에서 보듯, 서비스품목은 음식서비스나 대체로 음식과 관련된 e쿠폰 서비스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행과 문화 관련 서비스 거래액은 이번 코로나 국면으로 감소한 것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1인가구 증가로 인해 혼밥 문화가 증가하고, 1인가구 중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기존에 비해 커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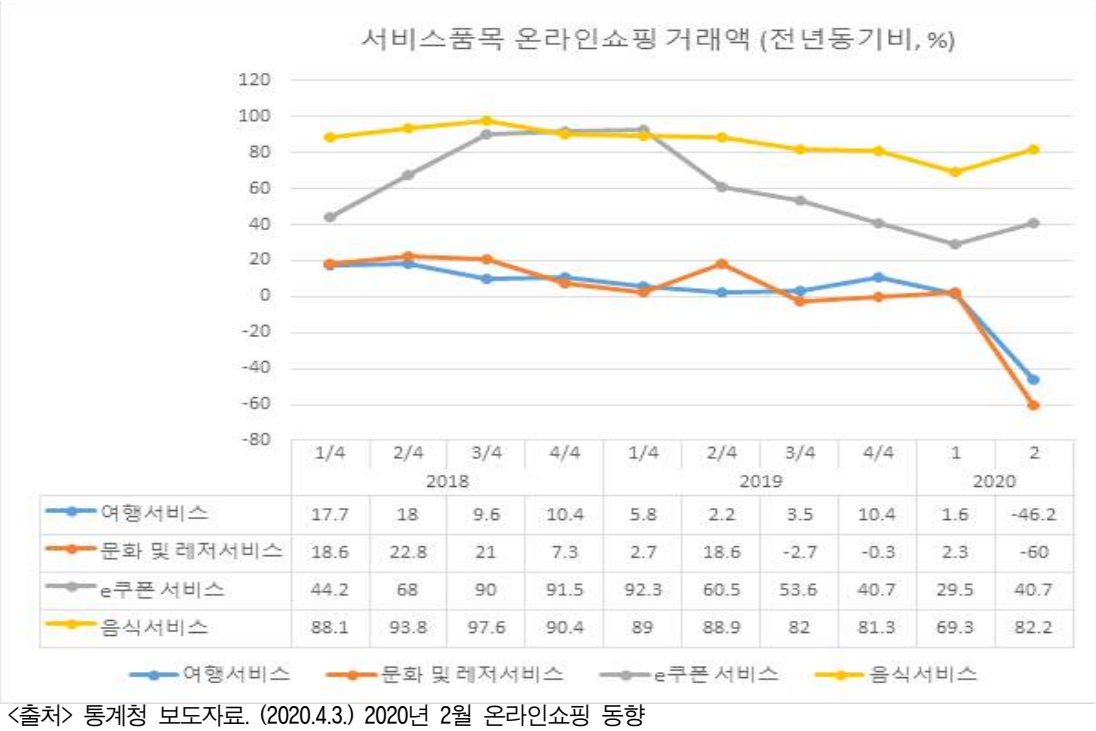
<그림 22>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전년동기비) (단위: %)



	1/4	2/4	3/4	4/4	1/4	2/4	3/4	4/4	1	2
	2018				2019				2020	
가전	23.8	20.2	15.5	21.8	24.9	20.7	18.8	16.7	4.7	30.3
도서	9.2	10.1	1.1	11.4	4	7.7	10.5	8	-2.7	22.8
패션	10.7	16	12.9	16.8	12.3	14.5	17.4	15.2	7.7	12.1
식품	29.8	26.9	25.4	33.8	22	28.4	26.1	28.6	18.3	77.7
생활	13.8	18.6	10.7	19.2	13.9	13.9	17.8	14.9	17.7	51
서비스	27.9	30.8	25.8	28.7	24.9	23.7	23.8	30.6	23.1	-1.9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0.4.3.)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그림 23> 서비스품목 온라인쇼핑 거래액(전년동기비) (단위: %)



	1/4	2/4	3/4	4/4	1/4	2/4	3/4	4/4	1	2
	2018				2019				2020	
여행서비스	17.7	18	9.6	10.4	5.8	2.2	3.5	10.4	1.6	-46.2
문화 및 레저서비스	18.6	22.8	21	7.3	2.7	18.6	-2.7	-0.3	2.3	-60
e쿠폰 서비스	44.2	68	90	91.5	92.3	60.5	53.6	40.7	29.5	40.7
음식서비스	88.1	93.8	97.6	90.4	89	88.9	82	81.3	69.3	82.2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0.4.3.)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3. 소비자의 소비방식 변화

-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해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를 활용해 소비하는, 소비방식의 변화[37] 또한 자영업 양극화의 요인이다.**
  - 스마트폰이 발달한 이후 온라인 정보를 활용한 소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또 다른 자영업 양극화를 만들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식업이다. 소비자의 음식점 방문패턴은 과거와 달리 식당을 미리 검색하고, 식당에 대한 블로그 후기 및 평점 등을 활용해 방문여부를 결정하는 패턴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언론에 소개된 맛집을 온라인에서 검색한 후 평가가 좋을 시, 사전예약을 하거나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음식 구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인가구가 늘어나고,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음식 구매에 있어서도 자체 후기나 평점 등을 통해 소비가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다.
  - 게다가 사람들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외식업 양극화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더 심화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외식업의 위기라는 현실에서도 잘되는 가게는 여전히 잘되고, 운영이 어려운 가게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지난 4월 11일 용산구의 유명한 A 가게는 영업시간 내내 좌석 100석이 빈 적이 없었고, 저녁 7시쯤 방문한 손님 기준으로 대기 손님이 20팀이 넘을 정도로 성업한 반면, 금천구 B 가게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 토막이 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배달서비스'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38]
  - 이처럼 온라인 정보활용을 통한 구매가 보편적인 소비패턴으로 자리잡히면서 근본적으로 '온라인 광고(마케팅)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 프랜차이즈 및 대형업체의 유리한 구조가 공고화되는 반면, "소형식당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광고비를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39]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 **요약하면, 우리사회에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포장과 소용량 단위를 판매하는 유통업의 발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가생활 및 헬스케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오프라인에 의존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태가 보편화되면서 소매업과 음식업의 매출 양극화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37) 삼정 KPMG 경제연구원(2016)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비자, 소셜미디어 활용, 간편결제 활용"과 같은 소비패턴의 11가지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을 제안한 바 있음.
38) 조선일보. (2020.4.1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8/2020041800069.html
39) 블록와치. (2019.12.1.) http://blockwatch.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97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자영업 중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업 종사자는 지난 20년간 이미 구조적으로 몰락해오고 있다. 특히 해당 업태의 영세사업자들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으로 더이상 역전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졌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

- **그러나 동시에 자영업의 위기가 구조적 원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은 한편으로 경계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동성 지원은 한편에서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계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소매업과 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위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가속화된 것으로 이미 그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몰락해왔기 때문에, 특히 해당 업태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이전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낮다. 따라서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고 해도 결국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오히려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나이스(NICE)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은 전년대비 11%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4% 증가율을 보인 가계대출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가계대출 시장에서 다중채무자 비율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 달리,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대출 보유수가 2개, 3개로 증가할수록 잠재부실률도 3.9%, 4.7%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2019년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47.4만명(비율 23%)에 달했다." [40]

- **무엇보다 자영업 대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점은 자영업 종사자들을 최대한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 앞서 6~7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현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41]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존처럼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의 자영업에 뛰어들면 지금보다 훨씬 폐업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자의 자영업 진출을 유독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나마도 청장년 시절 모아둔 자산을 잃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국제사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한 고용 시장에서 이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최소한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준비없이 뛰어드는 것은 경

40) 박희우. (2020.2.11).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자영업자의 특성 변화. 나이스(NICE) 리서치센터. (최근 검색일: 2020.4.23.). https://www.credit.co.kr/ib20/mnu/BZWCACCLM04
41) 베이비부머(1953년생~1963년생)인구는 총 712만명으로 추정됨(통계청).

계할 필요가 있다.

- 젊은층의 경우 폐업률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본론(p. 21)에서 확인했듯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창업자 중 1년 미만에 폐업하는 비율은 12.5%로 4~50대에 비해 2~3배 이상 높았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험이 많지 않고, 더구나 특별한 노하우나 준비기간을 갖지 않고 창업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취업 적령기도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전·사후 관리 없이 무작정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임금노동시장에 흡수되지 못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위 '되는 분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직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 본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특히 40~50대 중심으로 폐업하더라도 업종을 변경하여 재창업하기보다는 같은 업종에 재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매업이나 음식업에서 폐업을 경험했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동종업종에 재창업하는 것은 성공확률이 낮다.**

- 앞서 분석한 <표 9, p.21>를 다시 인용하면, 2019년 폐업한 소상공인 중 폐업 이후 생활에 대해 재창업(같은 업종 재창업, 휴식 중 재창업 계획, 업종 변경 재창업 합)을 선택한 이가 약 43%였고, 취업(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휴식 중 취업 계획 합)을 선택한 이가 약 39%였다.
  - 43%의 재창업을 선택한 이들 중 '같은 업종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약 65%(28.3%÷43%) 수준인 반면, 업종을 변경하여 재창업 하겠다는 비중은 16%(7%÷43%)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에 도전한 많은 이들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을 또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타겟팅화된 업종전환 교육을 활성화해 소위 '되는 분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한편, 폐업 후 취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의 비중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는 점을 볼 때 앞서 강조한대로 이들을 고용시장에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재교육 및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표 9, p.21> 2019년 폐업 소상공인 연령별 폐업 이후 생활 (단위: %)

구분		사례 수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같은 업종 재창업	계획 없음	휴식 중, 재창업 계획	휴식 중, 취업 계획	업종 변경 재창업	기타
전체		501	31.3	28.3	16.4	7.8	7.6	7.0	1.6
연령	30대 이하	96	41.7	22.9	13.5	8.3	4.2	7.3	2.1
	40대	215	29.8	33.0	14.0	7.4	7.9	6.5	1.4
	50대 이상	190	27.9	25.8	20.5	7.9	8.9	7.4	1.6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19.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표4 인용

- **기존에 존재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임금노동자[42]나 실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영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성격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의 양상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현재 실업자 직업훈련은 음식서비스 등과 같이 실패확률이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 산업 수요를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전직훈련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2019-03 보고서[43]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실업자 직업훈련은 "경영사무, 보건의료, 음식서비스 훈련에 집중되어 있는 것(p.23)"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가자의 63.5%[44]가 위 세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특히 음식서비스 훈련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참여 비중이 높았다(<표 23>). 음식업에 종사하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현실(<표 7, p. 2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고령층 실업자가 음식서비스 분야에서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같이 미래 산업 수요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층마저 여전히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습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음식서비스 훈련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 23> 2018년 1월~12월 실업자 직업훈련 직종별 실시현황 (단위: 명)

실업자훈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	19,828	118,181	47,914	40,732	33,296	17,158
1순위	음식서비스	경영행정사무	경영행정사무	경영행정사무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2순위	미용서비스	정보통신연구	음식서비스	음식서비스	음식서비스	음식서비스
3순위	기계설치정비	예술디자인방송	미용서비스	돌봄서비스	경영행정사무	경영행정사무

<출처> 김기식・박선나. (2019).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 더미래연구소・우리교육연구소. <표 19> 재인용 (원자료 출처-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포털(HRD-Net). 고용행정통계-실업자훈련실시현황 참고 재가공)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라는 재난적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으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번 계기로 자영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우선, 영세 소매업・음식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자영업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청년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경험 없이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은퇴자를 중심으로는 적절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소매업이나 음식업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섣부른 운영자금 대출이 오히려 그나마 청장년시기 축적한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설혹 자영업을 창업, 재창업 하더라도 기존의 자영업자 내지는 새로 진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존 직업 재교육 시스템에서 특화된 자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현재와 미래,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가 초래할 부정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2) 현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자영업자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0).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43) 김기식·박선나. (2019).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 더미래연구소·우리교육연구소
4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0).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p.30

[참고문헌]

OECD Data. Self-employment rate(1990~2018)
The World Bank. GDP growth(annual) (1961~2018)
The World Bank. GDP per capita(2018)
The World Bank. GNI(Atlas method(current U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3.25.) 사상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0).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관계기관합동. (2020.3.19.)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계부처합동. (2020.4.22.)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0.4.7.)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부가가치세) 각 연도
권규호·오지윤. (2014).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14 상반기
김광수 외. (2016). 소비패턴의 11가지 구조적 변화.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인사이트 ISSUE 43
김기식·박선나. (2019).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 더미래연구소·우리교육연구소
김기식·주민지. (2020).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IF REPORT 2020-01. p.17
김주영 외.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925. p.238
남윤미. (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7-5
류덕현 외. (2015).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p.11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조사(2014~2019)
윤여문·박은형. (2020.4.13.)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7호
이승렬. (2018).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8-10
정인·강서진.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가구 연구센터
주동헌 외. (2013) 지역경제 자영업 활동 결정요인 및 구조개선 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3-10, P.112
중소기업중앙회. (2019.5.)『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매월
통계청 보도자료. (2020.4.3.)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2020년 고용동향 매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70~2019)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2015~2019 소매업태별 판매액)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013~2018)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1985~2019)
통계청. 인구총조사(1995, 2005, 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993~2019)

[온라인 자료 및 언론기사]

Countryeconomy. (최종검색일: 2020.4.28.) https://countryeconomy.com/gdp/germany?year=1960
경향신문. (2017.5.16.)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5161652001#c2b
뉴스웨이. (2020.5.6.) http://newsway.co.kr/news/view?tp=1&ud=2020042815582038438
박희우. (2020.2.11).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자영업자의 특성 변화. 나이스(NICE) 리서치센터. (최근 검색일: 2020.4.23.). https://www.credit.co.kr/ib20/mnu/BZWCACCLM04
블록와치. (2019.12.1.) http://blockwatch.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97
서울신문. (2017.4.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0003001
서울특별시 뉴스. (최종검색일: 2020.4.28.)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8268
세이프타임즈. (2020.3.25.)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97
人口統計資料集(2005, 2020). (최종검색일: 2020.4.6.) http://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opular2020.asp?chap=0
전자신문. (2020.2.27.) https://m.etnews.com/20200227000191
조선일보. (2020.4.1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8/2020041800069.html
한국경제. (2020.4.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29502i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최종검색일: 2020.4.23.) https://ecos.bok.or.kr/jsp/vis/keystat/#/detail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20-04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발행일 2020. 05. 20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원혜영)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20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3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 본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더좋은미래의 공식입장과 무관합니다 ※